

연구보고서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2010. 12

재단  
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2010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명 :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책임 연구원 : 이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 원 :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 기간 : 2010. 09. 01. - 2010. 12. 28.

이 책자는 2010년도 국회활동지원단체보조연구 용역계획에 의하여 한국의회발전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로서 의정활동연구에 활용되도록 발간한 것입니다.



##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최근들어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면서 여성정책 공약의 위상을 분석해보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결성된 이래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대표되듯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문화, 특히 선거풍토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분석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선거를 전후로 제시된 기초적인 공약내용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공약이 최고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여성계의 압력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체계적인 여성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여성정책의 내용도 모자보건복지와 같은 복지적 차원의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장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여성관련 일회성 회의개최 정도를 여성정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2006 지방선거와 2010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은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정책의 제안 분야와 숫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선거당시 주요 이슈에 대한 반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2006년 선거에서는 행복한 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공약들이 주요 정당에서 제기되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일가족양립과 관련한 공약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공약인데, 2006년 선거에서는 보육서비스 확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단축, 방과후 학교라는 형태로 제안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는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도입과 같은 보육정책을 일하는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접근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등 정책의 범위가 다소 좁혀진 상태로 제안되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일자리, 취업시장 확대 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2010년 공약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비정규직 고용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서도 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일자리 공약에 여성과 관련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여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분야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의 문제는 여성문제 중 가장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안전의 문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밖에 여성대표성,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는 대략 선언적 수준의 내용, 즉 여성재단 신설, 여성지위향상 이라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해 볼 때,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다양했고, 여야 정당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많은 정책공약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10년 지방선거는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 발표되었으나,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이 양성평등이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발전되었다기 보다는, 여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WID)으로 후퇴한 듯하다. 일가족양립은 보육정책과 휴가정책 그리고 근로시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저출산 극복의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 관련공약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은 이번 2010 지방선거 여성공약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정부차원이나 정당차원에서

2006년까지만 해도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던 한부모가족, 미혼모, 조손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Ian Budge(2001)의 주장대로 한국 정당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선거의 경쟁적인 압력 때문에 각 정당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6년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관련 주요이슈에 대해 서로 유사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 선거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강조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였다는 점,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정당의 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후보자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후보자들의 여성정책공약의 지역적 특징 중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여성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공약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도 있었는데, 후보자들의 각 지역별 여성문제의 현황과 원인 파악에 대한 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지역맞춤형 정책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을 살펴봤을 때, 후보자가 제시한 가장 빈도 높은 공약을 정리해보면, 1순위는 일가족양립(보육정책), 2순위 일자리 창출, 3순위 가족정책(한부모, 저출산,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의 복지 및 건강정책의 순으로 정리약될 수 있다. 다만, 가족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정책은 우선 출신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방선거에 제시된 여성공약은 당대 여성정책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담론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목 차

I. 서론 .....	1
II. 선거공약의 중요성과 여성정책 공약평가 .....	1
1. 매니페스토의 의미와 한국의 경험적 연구 .....	1
2.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공약 평가 .....	5
3. 영국 사례 .....	8
III.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과정 및 평가틀 .....	12
1. 평가방법과 기준 .....	12
2.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단구성 및 한국형 지표 개발 .....	15
3. 성 인지적 지표의 개발 및 시범적 적용 : 2006년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	17
IV. 2010 민선5기 지방선거 여성당선 현황과 여성단체의 활동 .....	26
1. 2010 6.2 지방선거와 여성 진출 현황 .....	26
2. 2010 6.2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별 여성참여 현황 .....	42
V. 민선 5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 .....	62
1.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 내용 .....	64
2.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권역별 여성정책 공약 현황 .....	68
VI. 민선 4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 .....	82
1.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 내용 .....	82
2.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공약 내용 .....	86
VII. 민선 4기 및 5기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분석 .....	104
1. 정당의 10대 우선공약과 여성정책 공약의 순위 .....	104

2. 민선 4·5기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비교 및 특징 .....	106
3. 여성단체 공약요구사항의 반영정도 .....	109
<b>VIII. 결론 및 향후과제 .....</b>	<b>118</b>
1.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공약 특징과 한계 .....	118
2. 향후과제 .....	119
<b>참고문헌 .....</b>	<b>126</b>
<b>[부록] 민선5기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의 여성관련 공약 .....</b>	<b>128</b>

##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 I. 서론

최근들어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젠더(Gender)관점에서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또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면서 여성정책 공약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에 이르는 각종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수립되어 왔다. 여성부 신설이 몇 대에 걸친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제시된 끝에 성취되었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체계가 미비한 여성정책의 경우 선거공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과, 이의 이행을 담보하라는 여성계의 운동적 압력이 얼마나 강도 있게 추진되는가의 여부에 의해 그 성과가 결정되었다. 여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중앙단위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거나, 선거공약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대선·총선 등 전국단위의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와 정책범위의 차이가 지방선거에 반영되어 여성정책관련 공약들은 매우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성정책관련 공약들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가 본격화된 2006년 민선4기 지방선거와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여성정책관련 공약에 대해 분석하고,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거공약의 중요성과 여성정책 공약평가

#### 1. 매니페스토의 의미와 한국의 경험적 연구

매니페스토(manifesto)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참 공약 선택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매니페스토는 우리나라의 선거공약과 같이 목표가 애매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나오지 않는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한 시민운동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결성된 이래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대표되었듯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문화, 특히 선거풍토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자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sup>1)</sup> 매니페스토가 최초로 쓰인 곳은 영국으로서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탐워스(Tamworth)에서의 선거에서 당시 필 (Robert Peel)당수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했다고 되어 있으며,<sup>2)</sup> 이에 의하면 영국 매니페스토의 역사는 약 170년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1906년 노동당이 매니페스토를 문서화하였고,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도 이에 따르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매니페스토 스타일은 1935년 보수당 매니페스토가 시초가 되고 있다(이현출 2006). 매니페스토는 실시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이며, 우리의 정당이 선거공약이라고 칭하는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적 요망사항 리스트(wish list)를 나열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영국 노동당 매니페스토의 예> ※ 자료: Martin Powell(2002)

25세 미만 25만명의 청년 고용  
 5-7세 아동 학급규모 30인 이하로 축소  
 향후 2년간은 현재의 지출제한 틀을 넘지 않음.  
 100만인을 진료대기 상태에서부터 해방

1) 사전적으로는 “정당이 총선거후에 정권을 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Oxford Companion to 20th British Politics, Ramsden, Oxford)로 정의되고 있다.

2) 전문은 <http://www.scholars.nus.edu.sg/landow/victorian/history/tamworth2.html> 참조.

\* 2004년 총선에서 우리나라 어느 정당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제시 방안

창업촉진,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대책 추진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신규 채용확대  
공기업의 청년채용 적극 권장  
통합적 청년실업대책인 YES(Youth Employment System) KOREA를  
시행하여 구직자에게 맞는 개인별 직업알선 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센터를 인력수급 중추기관으로 전문화

※ 자료: <http://www.nec.go.kr> “정책비교: 정당정책공약 사이트”(검색일: 2004. 4. 1)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매니페스토 운동의 역사도 길고 이러한 운동이 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시한 지 오래된 영국의 경우 정책공약집이 유권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지 않으며 정책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정책공약은 여전히 선거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공약집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며 공약의 이행정도 또한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정책을 표결하려 한다면 매니페스토는 매우 중요한 후보선택기준이 되고 있다(김은경 2007).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시 정책공약의 검증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김상준·오현순 2009).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여 17대 대통령선거, 18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비합리적 정치문화 선거풍토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현재 선거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냉소주의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남은 문제다. 특히 온전한 정책검증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여건과 장치는 여전히 매우 미약한 상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운동이 한국에 소개된 이래, 한국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둔 연구가 되어왔다.

이현출(2006)은 5·31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를 평가하면서 이 시기에 활용된 다양한 평가지표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

부는 스마트(SMART) 지표, 지속가능성 지표, 자치역량강화 지표, 지역성 지표, 이행평가 지표의 5개 분야를 활용하였다고 한다. 먼저 스마트 지표는 목표의 구체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자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을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vailable), 정책의 타당성(Relevant), 시간계획성(Timed)이라는 SMART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셀프(SELF) 지표는 후보자의 지역발전 방향과 가치 중 지속성(Sustainability), 주민참여 및 지자체 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평가계획(Follow-up) 등 4개 분야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목외(2007)는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의 정책 공약집과 후보자들의 의견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타당성 및 적실성에 대한 실제적 검증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면서, 대선 정책공약 평가지표 개발의 주요 항목으로, 정책 우선순위, 주요 쟁점과 이슈, 정책공약 실현가능성, 당선자의 재임 기간 동안 공약 이행수준 등 총 4가지 분야를 들고 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역시 독자적인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로 파인(FINE) 지표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파인 지표는 실현성(Feasibility), 반응성(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의 세 가지 상위지표마다 2가지의 하위 지표, 즉 재정적 실현성 및 정치적 실현성, 지역적 반응성 및 국가적 반응성,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효율성을 포함하였다. 파인 지표는 기존의 스마트 지표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치중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즉 스마트 지표의 대부분의 내용을 실현성에 포괄하고 반응성과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것이다(이현출 2006, 30-31).

매니페스토와 관련하여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남승하·오수길(2008)의 연구에서는 2007년 7월에 시행한 민선 4기 1주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차 평가를 거쳐 본대회에 소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광주광역시 동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포천시 등 공약이행과 관련한 주민평가단 구성 및 관련활동 분야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모형의 가능성과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의 지평을 확산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또한 조진만(2010)의 연구는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전개된 2010 시민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을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입안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선거 이전에 일반시민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이것이 실제 매니페스토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원의 명확성이다. 매니페스토는 재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5-7세 아동 30인 학급 실현’을 위해 1억 8,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엘리트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25만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 감소를 위해서는 잉여이익을 낸 기업에 1회에 한해 과세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한의 명확성이다. 매니페스토에서는 기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대통령과 단체장, 국회의원은 각각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한을 확실히 하지 않는 중장기 대책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정권획득시의 구체적 정책을 표시한 것이 매니페스토라면, 대통령이나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이 된 후는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선거시에는 매니페스토 달성도를 평가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선순위 공약의 중요성이다. 영국 노동당 1997년 매니페스토의 경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우선순위별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블레어 당수는 선거기간중 연설에서도 “나에게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셋 있다. 그것은 교육, 교육 그리고 교육이다”라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 2.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공약 평가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정책 공약의 범주와 분류 작업을 주요 선거마다 준비하여 발표해왔다. 특히 2002년 대선여성연대(2002)는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 4명이 제시한 여성관련공약을 3대 핵심과제와 10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sup>3)</sup> 3대 핵심과제는 호주제 폐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보육의 공공성 확보이며, 10대 주요과제로는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주요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한부모 가족 지원, 모성보호 및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평화·통일 정책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장애인 지원, 여성 농민 지원, 성평등 의식 정착, 노인 복지, 성 인지적 예산 및 정책 등이다. 김복규(2003)의 연구는 2002 대선에서 나타난 여성정책공약을 분석하고, 선거과정을 통해 공약이 구체화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수정되는 기회와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당시 여성계의 가장 큰 과제였던 호주제 존폐 논의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인 폐지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는 선거과정에서의 공론화가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2002 대선여성연대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고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 4명의 여성공약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3가지 측면에서 여성정책을 평가하였는데 첫째, 여성정책의 관점, 둘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셋째, 소요예산 확보라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 여부,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여부, 정책의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라 함)는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자료, 여성공약자료, 16대 국회 해당 분야 상임위 회의록 등 국회 의정활동 자료, 관련 사회운동단체의 조사 자료나 의견 및 언론검색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2 대선여성연대의 평가 틀을 따랐다. 여성정책의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개혁적 정책인가, 소요예산확보 등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가,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했는가 하는 3가지 사항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데, 개혁성을 제외하고는 2002대선여성연대와 같은 범주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순과 김은경(2006)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사용했던 매니페스토 평가 틀인 스마트(SMART) 지표<sup>4)</sup>와 셀프(SELF) 평가지표<sup>5)</sup>를 이용하여 여

3) 이는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한 <2002 대선여성공약>에 준하는 범주영역이다.

4)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목표달성가능성(achievable), 내적일관성(relevant), 시간계획성



성정책공약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지표에 성 인지성을 적용하여 성별 분리통계를 사용하였는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여성의 정책 요구도를 반영하였는지 등도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정책공약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이르기 이전에 선언 수준에서라도 논의되어야 할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가 실천가능한 공약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의 틀에 맞추기 어려운 정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셀프지표의 “지속가능성” 항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분석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선거를 전후로 제시된 기초적인 공약내용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공약이 최고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여성계의 압력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체계적인 여성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여성정책의 내용도 모자보건복지와 같은 복지적 차원의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장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여성관련 일회성 회의개최 정도를 여성정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2년 6·13지방선거의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관련 공약을 분석한 김명숙(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정책공약이 경제발전관련 공약 등 다른 정책공약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있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여성단체의 주도 하에 여성정책공약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성정책을 개발하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매니페스토 운동의 기본적인 목적, 정책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취지,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최근 실시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

(timed)이라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됨.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평가(follow-up)라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됨.

여성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민선 광역단체장의 여성정책 공약분석의 기준은, 여성단체와 학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분석 기준과,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 범주를 고려하여, 8가지로 구분하였다. 8가지는 가족정책, 일가족양립, 일자리, 복지 및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공공분야 대표성, 성 주류화 등이다.

### 3. 영국 사례

매니페스토는 선거 캠페인을 위해 정당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공식적인 정책 문서로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매니페스토 역사는 길게 잡아 170여년에 이른다. 그것이 처음 문서화된 것은 1906년 노동당에 의해서였고, 최근에는 값싼 신문의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거나, 각 정당의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이며 변모해왔다. 최근의 매니페스토는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가독성을 높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각 정당의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짧고 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편집을 선호한다. 이러한 매니페스토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기에 돌입하면서 배포되는데, 유권자들을 의식한 매니페스토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직접 읽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미디어들이 당의 매니페스토 내용에 근거하여 각 정당의 정책을 분석·설명하고 있으며, 미디어의 정보가 공공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가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거 캠페인에서 매니페스토의 역할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캠페인의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매니페스토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Judith Bara(2005b)가 “민주주의의 4~5개년 계획”(597)이라 명명하고 있듯, 매니페스토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정당정책 선전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정당이 정권을 획득할 경우 추진시켜 나갈 정당의 의도, 강조점, 약속, 공약, 정책 또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로 구성된다(Judith Bara 2005b). 또한 그 공약을 보다 상세화시킬 경우, 그러한 공약에

는 정책의 방향 뿐 아니라 그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취할 행동, 수단 그리고 소요될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sup>6)</sup> 일반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우리는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위치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내용(혹은 대립되는 내용)으로 구성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Ian Budge(2001)는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그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부분의 정당은 다수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를 꺼리며, 따라서 정당들은 선거의 경쟁적인 압력에 의해 각각의 의제 영역 내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분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이 아닌, 각 정당이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각 정당에서 여성관련 의제가 매니페스토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필 경우, 여성관련 의제가 전체 정책 중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 상의 우선순위에서 여성관련 의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역시 해석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영국의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는 여성의 의제를 배타적인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즉, 매니페스토 상에서 ‘여성 공약’이라는 독자적 섹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보건, 교육, 지역 사회 등의 각 섹션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에 호소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공약들을 부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의제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친 여성적인 공약을 제안하는 문장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Bara(2005a)는 1970년 동일 급여법(Equal Pay Act)과 1975년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된 이후 1970년과 2001년 사이에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에서 여성관련 의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녀는 여기서 ‘복지 국가의 확대’, ‘교육의 확대’, ‘비경제적 인구 집단’을 세 가지 변수로 지정하고, 유사문장(quasi statement)를 분석단위로 한 MRG(Manifesto

6) Judith Bara는 “A Question of Trust: Implementing Party Manifesto”에서 공약을 그 상세한 정도에 따라 ‘막연한 공약’ ‘일반적 공약’ ‘구체적 공약’ ‘상세화된 공약’의 네 종류로 분류한다.

Research Group)와 컴퓨터화된 코딩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ara는 반차별법이 도입된 이래 세 정당 모두에서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지표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고, 특히 1992년에 여성관련 의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따르는 1997년과 2001년에는 정부의 효율성 및 공적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같은 의제들이 다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게 됨에 따라, 이 시기 여성 관련 의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6번의 선거 기간 동안 'top ten'의 순위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들의 수가 각 정당마다 60(6\*10)가지라고 한다면, 여성관련 의제의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당은 이 중 59가지, 자유 민주당은 56가지, 보수당은 51가지의 의제들을 6번의 선거 기간 동안 top ten의 순위 안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top ten의 순위 안에 여성관련의제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체 top ten의 순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Bara는 top ten 중 1순위에는 10점, 10순위에는 1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이 여성 관련 의제들에 부과하는 비중에 점수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수식에 따르면, 6번의 선거에서 세 가지 지표가 모두 1위에 랭크되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최고점수는 180점이다. 각 정당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영국 선거공약 중 여성관련 의제의 비중

정 당	점수	전체공약내 비중
노동당	117	39%
자유민주당	104	35%
보수당	47	16%

Bara는 위의 결과로부터 세 정당 중 어떠한 정당도 자신들의 주요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여성의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우선순위화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덧붙여서 이러한 결과가 곧 정당들이 위 의제들에 관심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정당들은 1980년대 이래 위 의제들을 좀 더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음

을 강조한다.

한편 Hofferbert와 Budge(1992)는 정당의 프로그램상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정책 사이의 충돌로 드러나기 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조점들 간에 상이한 선택을 함으로서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 Ⅲ.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과정 및 평가들

#### 1. 평가방법과 기준

매니페스토 시스템은 매니페스토는 꼭 지키겠다는 선거공약이다.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선거공약과의 차이는 정책이 수치로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검증하여 현장에 피드백 한다'는 PDS(Plan-Do-See) 사이클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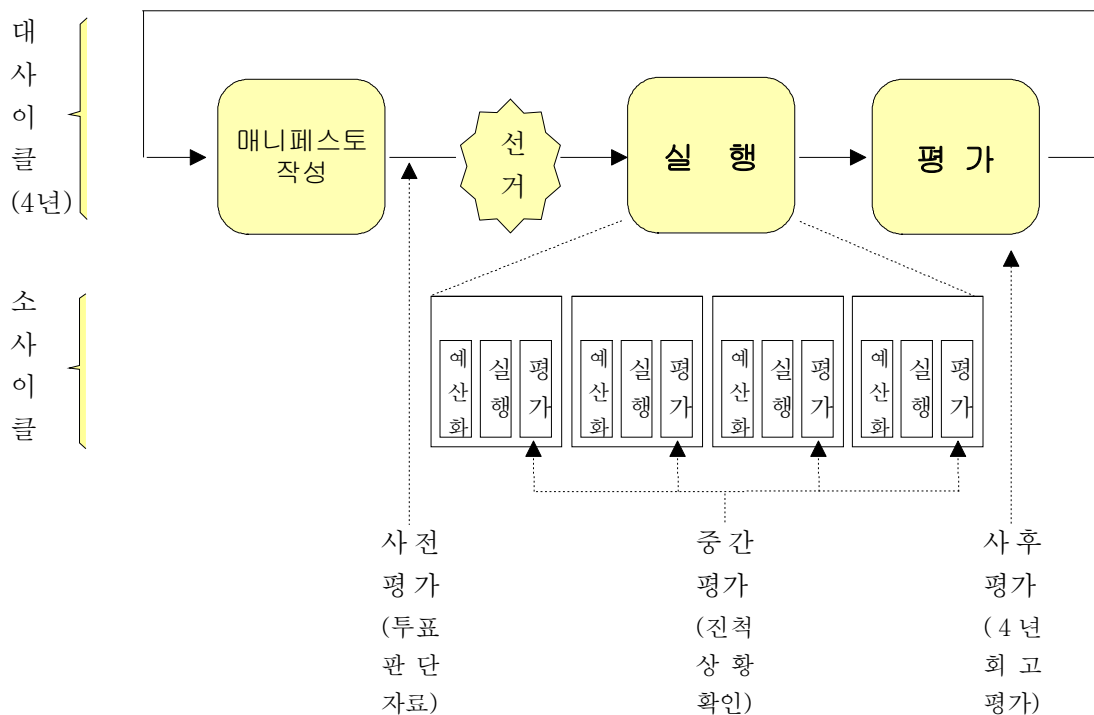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평가와는 동떨어져 있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작성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의 틀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래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니페스토 평가를 크게 정리하면 우선 1단계로 선거시에 각 후보자의 로컬 매니페스토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투표시 판단근거로 삼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평가”와, 당선 후에 정권담당자의 매니페스토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수정·개선에 연결시키기 위한 “중간평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주로 복수 후보자의 로컬 매니페스토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주로 당선자의 로컬 매니페스토에서 약속한 정책의 진척과 성과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모두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평가를 논할 때는 이 두 가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사이클에 관해서는 “작성 (선거) → 실행 → 평가 → 차기의 작성(선거)”이라는 선거를 축으로 한 4년 단위의 대(大)사이클과 4년간의 실행 단계의 각 연도별 “예산화 → 실행 → 평가 → 다음 연도의 예산화”라는 예산회계연도를 축으로 하는 1년 단위의 소(小)사이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계연도별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타당성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사후평가의 제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시에는 현직인 경우에는 구 매니페스토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두고 회고적(retrospective)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전개할 새로운 비전을 명시한 신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전망적(prospective) 평가를 동시에 함으로서 투표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이현출 2006).

<그림 III-1> 로칼매니페스토 평가 사이클



\* 자료: 西尾眞治. 2004. “地方におけるマニフェスト・サイクルの確立に向けて,” 『地方財政』, 제 605호 (2004. 11). p. 9 참조

매니페스토의 평가주체는 일차적으로 선거시 최초의 매니페스토의 경우 제 3자에 의한 평가가 원칙일 것이다. 국정선거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 싱크탱크나 언론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그 주체가 될 것이다.

또한 매니페스토 진척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에 따라 자치단체, 단체장 또는 의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기평가”와 자치단체 외의 주체가 평가하는 “제3자 평가(외부평가)”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자 평가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주민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행정의 당사자가 행하는 경우와 자치단체 외부의 단체로 자치단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 3자의 관점(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정책공약은 SMART 기준으로 비교 ·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SMART에 대한 개념(이론)적 수준과 경험적 수준의 개념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SMART & +로 소개한다(김미경, 2006).

< 표 III-1 > 정책공약 분석기준별 내용

구분	내용
Specific	구체적 · 실제적 · 자원조달방법
Measurable	구체적 · 측정가능
Achievable	목표달성가능 · 자원조달가능 · 법과 제도 부합성 기관역량 · 지역자원 · 의지
Relevant	타당성 · 내적 일관성(목표상충) · 법과 제도 부합성 문제인식 · 수요적합 · 비전
Timed	임기 내 고려 · 시간계획
+측면	경제성 측면 : 비용효과
	공정성 측면 : 복수목적효과

S (specific) 구체성 기준

구체성 평가요소	정책공약선정 이유가 구체적인가?
	목표치가 구체적인가?
	목표달성방법이 구체적인가?
	자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인가?

M (measurable) 측정가능성 기준

측정가능성 평가요소	목표가 수치나 비율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A (achievable)** 달성가능성 기준

달성가능성 평가요소	목표가 달성가능한가?
	목표달성방법이 실현가능한가? (법제도, 지역자원, 기관역량, 추진의지)
	채원조달이 가능한가?

**R (relevant)** 적실성 기준

적실성 평가요소	목표가 현실에 부합하는가?
	목표 간에 상충하지는 않는가?
	목표가 주민수요에 부합하는가?

**T (timed)** 시간계획성 기준

시간계획성 평가요소	임기 내 착수 및 완료할 수 있는가?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기준

+측면	경제성 측면 : 비용효과
	공정성 측면 : 복수목적효과

2.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단구성 및 한국형 지표 개발

1) 한국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의 평가단 구성

- (1) 평가주체 :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지역 추진기구  
평가단
- (2) 평가대상 : 매니페스토 지역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평가단 활동이 가능

한 지역후보자가 작성한 매니페스토(16개 광역단체장 후보 및 전국 20개 이상 기초단체장 후보, 해당지역은 추후 결정.)

(3) 평가단구성 : 후보자 추천 위원, 공개모집한 주민평가위원, 추진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지역 추진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4)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 추진본부에서 개발한 SMART-SELF지표를 활용하여 진행함.

(5) 평가기간 : 2006년 5월 18일- 20일 사이

(6) 평가결과 발표 : 평가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발표하되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함.

#### ■ 2006년 평가사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자	비 고
*	SMART-SELF 초안 발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출범식)	2월 1일	
1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확정	4월 24일 까지	
2	평가지표 초안 개발 완료	4월 20일 까지	
3	정당과의 협의 및 평가지표, 추진계획 확정	4월 30일 까지	
4	지역별 매니페스토 추진기구 확정	4월 26일 까지	
5	평가사업 지역 추진담당자 워크숍 진행	5월 3일(대전)	
6	추진본부 평가단 전체회의	5월 9일(서울)	
7	지역별 주민평가단 설명회 진행	5월 13일 까지	
8	후보자 매니페스토 발표	5월 17일 까지	
9	지역별 평가활동 진행	5월 18-20일	
10	지역별 평가결과 취합 및 발표준비	5월 21일	
11	평가결과 최종발표 (지역은 22일 발표)	5월 23일	

## 2) 평가지표<sup>7)</sup>

평가지표는 분야별 정책공약 평가는 SMART지표, 종합적 정책 평가는 SELF지표를 활용한다. 스마트 지표는 가치중립적이며 영국의 매니페스토의 기본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셀프지표는 우리사회가 지향해 나갈 방향과 지방자치의 목표를 담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 스마트(SMART) 평가지표의 구성예시

**S**(Specific, 구체적이고),  
**M**(Measurable, 측정가능하며),  
**A**(Achievable, 달성할 수 있으며),  
**R**(Relevant,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T**(Timed, 시간계획이 포함됨)

### ○ 셀프(SELF)평가지표의 구성예시

**S**(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E**(Empowerment 자치역량강화),  
**L**(Locality 지역성),  
**F**(Follow-up 이행평가)

## 3. 성 인지적 지표의 개발 및 시범적 적용 : 2006년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모든 일반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현재 국내의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정책입안자들이 될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쓰레기 분거수거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

---

7) 매니페스토추진본부의 스마트-셀프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평가방안에 대해 계획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2006년 2월 18일까지 1차 계획수립을 완료한바 있으며, 1차 평가작업은 5월 19일 실시하였다.

당하는 일은 주부의 몫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공약인 것으로 보였으나, 궁극적으로 가정내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확고히 만드는 정책으로서, 성 인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이밖에도 일반 정책 가운데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일반 주민에게 그 역할을 전가시키면서 의도하지 않은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이 제기되는 수준에서부터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공약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비교한다면 선거의 경우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accountability)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를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 즉“선거계약”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선거계약은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따라서 단순한 리더의 선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 결정과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거계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치게임의 룰을 설정시켜 정치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선거계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선거를 위한 도구로서 선거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경쟁 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ELF 지표에 성 인지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성 인지적 SELF 지표를 개발하여 보았다. 성 인지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각 후보자들의 여성정책 혹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대상을 언급함에 있어서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하였는지, 여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우선 점검하였다. 또한 기존 SELF

지표에서 지속가능성을 경제발전성, 생태환경보존성, 사회적 형평성의 맥락에서 이해했던 것을 여성정책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자치역량강화의 부분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협치의 강화로 간주되었으나 이를 여성인력에 대한 발굴과 분야별 역량강화로 보았다. 지역성의 부분은 지역현실반영으로 간주하여 이를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정도, 지역여성의 정책요구도 반영, 지역특성의 적합성이나 실현가능성의 정도로 가늠하고자 하였다.

1) 성인지적 SELF 지표의 분야별 채점표<sup>8)</sup>

<표 III-2> 성 인지적 SELF 지표와 채점표(안)

S(지속가능성 분야)

공약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계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a.																
b.																	
c.																	

E(자치역량강화 분야)

공약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계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a.																					
b.																						
c.																						

L(지역성 분야)

공약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계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a.																					
b.																						
c.																						

8)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의 SMART-SELF평가지표 중 SELF 지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함.

<표 III-3> 성인지적 SELF 지표의 적용

**S (지속가능성) :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의 실현결과로 지역여성정책의 지속성이 강화되느냐, 혹은 악화되는가를 다음 기준들을 적용하여 평가함.**

- 지역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내용이 없음 : 1점
- 지역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이 있으나 추상적임 : 2점
- 지역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구체적임 : 3점
- 지역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이 구체적이며 중단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4점
- 지역여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반영한 정책이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있으며 중단기 계획에서 명확한 수치로 나타나있음 : 5점

**E (자치역량강화) : 지역여성인력 발굴하고 역량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가를 다음 기준들을 적용하여 평가함.**

- 여성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없음 : 1점
- 여성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 2점
- 여성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있으며 부분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3점
- 여성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들이 기대됨 : 4점
- 여성인력을 비롯, 지역주민 등 협치영역 등에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많은 성과들이 기대됨 : 5점

**L (지역성) : 각 분야별로 제시된 정책들이 얼마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있으며(지역요구 반영), 지역 특성에 적합한(지역에서 실현가능한) 여성정책이 얼마나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여성정책이 제시됨 : 1점
- 지역 특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정책들이 지역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 2점
- 여성정책이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없음 : 3점
- 여성정책이 지역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있음 : 4점
- 여성정책이 지역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모든 여성정책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음. : 5점

**F (참여를 통한 이행평가) : 약속한 정책이행과정에 지역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여성정책 이행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1점
- 여성정책 이행평가 계획이 있으나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2점

여성정책 이행평가에 대해 지역여성들의 참여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3점  
 여성정책 이행평가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구체적인 참여계획과 방법 및 수단이 제시되어 있으며 여성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음 : 4점  
 여성정책 이행평가 계획이 구체적이며 필요한 자원과 수단, 정책들이 잘 나타나 있고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강화하려함 : 5점

2) 성 인지적 SELF 지표를 통한 사례분석

(1) 서울 강금실 후보(열린우리당)의 ‘시민참여, 투명시정’ 정책

S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2010년까지 5급이상 여성 공무원 20% 확대	-여성의 공직사회 참여 확대	-공직분야 관리직급 이상 여성의 저조한 참여에 대한 인지	
E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 5급이상 여성공무원 20%까지 확대 -민간전문가 대상 개방형 직위 도입	-위원회 여성 및 사회적 소수와 시민단체 참여 쿼터제 -시정의 시민참여통한 이해도 증진, 투명성 제고
L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서울시 공무원의 성별구조에 대한 문제파악 -서울시 50여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파악 (※공무원이 위원장을 독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여성공무원의 목소리 반영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극검토	

(2) 보육정책

가. 서울 오세훈 후보(한나라당)의 ‘여성/보육서비스-1동 1공공보육시설 확보’

(※인천 안상수 후보(한나라당)의 보육정책도 유사한 내용임)

S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4차년도 추진계획	-양질의 보육시설 증가	-서민층의 저렴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E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현황 파악	-보육교사수 증가	-	-
L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현재 공공보육시설 없는 68개동에 우선설치 -국공립 보육교사수(5,886명)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잔여공간에 보육시설 설치(학교, 동사무소, 도서관 등)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다가구임대주택의 보육시설전환 -국비 지원 (총 예산의 20%)	

나. 서울 강금실 후보(열린우리당)의 보육정책

S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2007/2008/2009/2010) -민간보육시설 공공화위한 사전 평가 인증 계획 (2006/2007/2008) -보육교사인건비 인상계획 (2006/2007/2008/2009)	-일자리 보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교실 운영 등 전업주부의 육아소외 예방효과, 주민참여 효과	-일하는 여성들에게 보육시설 확대 -전업주부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제공	
E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부모의 88%가 집근처 안심할만한 보육시설 부재 (2004년 모니터링결과)	보육교사등 일자리창출 (정책공급자)	-	-



	(정책수요자)			
L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보 육대상 아동의 36%에 불과.	-비강남권 지역,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등 서 민, 중산층 밀집지역에 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동별지역상황파악 -300호이상 신규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개소) -현행 500세대 이상 공 동주택건설시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있으 나, 서울시에서는 300세 대이상에서 설치시 추가 지원.	

다. 서울 박주선 후보(민주당)의 방과후 학교 정책

S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4차년도 추진계획	-사교육비 감소 -맞벌이, 저소득계층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보 육 책임	-저소득층의 교육적 심 리적 지도와 상담을 위 해 사범대학생과 소외집 단(저소득계층, 모부자가 정, 장애우 등) 자녀간 1:1 멘토링제 도입	
E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 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	-지역주민, 전업주부, 대 학(원)생 등의 강사 확보	-	-
L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방 과후 학교의 내실화 필요성	-초등학생은 예체능 위 주, 중고등학생은 특기적 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 머니에 개방, 방과후 도 서실 개방하여 자여와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전문가 인건비, 보육시 설 설치비.(서울시교육청 교부금규모 증액)	

라. 광주 오병윤 후보(민주노동당)의 장애인 정책

(※서울 김종철 후보(민주노동당)의 장애인정책도 유사한 내용임.)

S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2006-2008	장애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E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15세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38.2%)-장애남성의 인구대비 취업자비율 43.5% -장애여성 20.2% -광주장애인현황에서는 여성비율 빠져있음.	-	공공기관에 장애여성의 고용기획 증대	-
L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국가 및 지자체 소속공무원 정원의 2%는 의무고용사항(광주는 2.5%)의무고용제 도입 15년임에도 변치않는 수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고용했을때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경증장애남성 1명을 기준으로, 장애여성은 1.25명,중증장애여성은 1.5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	

마. ○○ 후보의 일자리 창출정책 사례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공약사례)

S	여성정책의 중·단기 계획여부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 여부	여성간 차이를 인지한 정도(사회적 형평성)	
	-	-	-	
E	지역여성인력 현황파악	여성인력활용 (경제분야)	공직내 여성인력 활용 (공무원)	지역여성과의 협치 강화 (정치분야)
	-사회적 노인 일자리 만명 창출계획, 보건복지부 30만	-	※공무원 신규채용 매년 250여명으로,	-

	일자리 목표 참고하여 산출(※여성노인에 대한 통계없음)		연간계획은 있으나 여성채용에 대한 계획부재	
L	지역여성문제의 원인 파악	지역여성의 요구반영	지역특성에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후보출마지역에서 현안이 되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부재	-보육시설 증대에 따른 고용산출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급균형문제에 대한 파악이 없음) -장애인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시설건립 (※장애인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 없음)		

## IV. 2010년도 민선5기 지방선거 여성당선 현황과 여성단체의 활동

### 1. 2010년도 6.2 지방선거와 여성 진출 현황<sup>9)</sup>

#### 1)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6.2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진출이 보다 증가했다. 19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의 경우 1991년 0.9%에서 1995년 1.6%, 1998년 1.6%, 2002년 2.2%(77명), 2006년 15%(434명), 2010년 21.6%(626명)로 늘어났다. 광역의회의 경우 1991년 0.9%, 1995년 5.8%. 1998년 5.9%, 2002년 9.2%(63명), 2006년 12.0%(88명), 2010년 14.8%(113명)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006년 1.3%(3명), 2010년 2.6%(6명)였다. 그리고 2010년도 처음 실시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여성당선자는 6.3%(1명), 교육의원 1.2%(1명)였다<표2, 3>.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시 총여성후보는 1411명으로 전체 후보 중 11.6%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제 5회 지방선거에서는 수적으로도 232명이 증가하여 비율상 5.6%p 상승한 17.2%를 차지하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각각 5.7%p, 6.4%p 상승하였다. 2005년 비례대표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에게 매 홀수번을 부여하고 50% 이상 할당하도록 한 이래, 광역과 기초의원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초의원 비례의 경우, 여성 후보자가 전체 80%에 이르고 있으며, 광역의원 비례의 경우 전회 대비 2.8%p 증가하였고, 총 후보자 중 여성이 67.3%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7%에 이르렀고, 4회 지방선거와 비교시 약 3.6%p

9) 김원홍(2010), "6.2지방선거와 여성",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 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도 전회 대비 약 4.6%p 상승했으며, 총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9.5%를 차지하였다. 제 1회 지방선거 이후 여성후보자 비율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회에서 3회까지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다가 제4회 선거에서 조금 큰 폭의 상승 모습을 보였고, 이번 선거에 들어서면 광역-기초의원 모두 2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되면서, 각 당이 이에 대응한 노력의 흔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제 5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여성(교육감과 교육의원 제외)은 전회 대비 216명 증가하였고, 당선인 중 여성후보자 비율은 5.5%p 상승한 19.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광역비례의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3%p에서 많게는 6.5%p의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여성당선자 중, 광역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광역 비례의원은 전체 당선인 중 71.6%, 기초 비례의원의 경우는 9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록 광역단체장은 배출하지 못했으나 기초단체장이 6명 당선됨으로써 전회 3명 당선에 비해 수적으로 2배 이상 배출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역과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출에서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이 각각 3.2%p, 6.5%p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란 보고서에서 여성의무공천제의 도입은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현재 지방의회(비례·지역구 포함) 여성의원 비율에서 8~10%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즉 광역의원의 12%, 기초의원의 15%인 여성 지방의원 비율이 20~25%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전망에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광역의원(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전회 4.9%에서 8.1%로 크게 증가한 점과, 기초의원(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4.4%에서 10.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에 앞서, 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 후보자 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바가 지대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여성후보 공천의무할당제의 효과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지방정치 성격과 관련하여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변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

<표 IV-1> 역대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전체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전체		여성		여성/전체(%)	
1991년		10,151		123		1.2		4,303		40		0.9	
1995년		11,970		206		1.7		4,541		71		1.6	
1998년		7,450		140		1.9		3,490		56		1.6	
2002년		8,373		222		2.7		3,485		77		2.2	
2006년	지역구	9,020	7,995	1,141	391	12.6	4.9	888	2,513	437	110	15.1	4.4
	비례		267		750		73.2		375		327		87.2
2010년	지역구	6,781	5,862	1,281	552	18.8	9.4	2,888	2,512	625	274	21.6	10.9
	비례		919		729		80.0		376		351		93.4

<표 IV-2> 역대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연도		후보자 수						당선자 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전체		여성		여성/전체(%)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995년	지역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례		178		79		44.3		97		43		44.3
1998년	지역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례		180		54		30		74		27		36.5
2002년	지역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년	지역구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2010년	지역구	2,046	1,779	333	154	16.4	8.6	781	680	113	55	14.8	8.1
	비례		267		179		67.0		81		58		71.6

6.2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여성 후보자 및 당선인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각각 37명과 35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를 배출하였고, 다른 지역은 많게는 9명(경남) 적게는 3명(충남, 전북)의 후보자를 배출하였다. 당선자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각각 12명과 13명을 배출하였

으며,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는 1명(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많게는 5명(대구)의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제주지역에서는 한명도 없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광역의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135명과 133명의 여성 후보자를 배출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게는 7명(울산), 많게는 36명(부산)의 후보자를 배출하였다. 당선자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68명, 6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게는 5명(울산), 많게는 19명(부산)을 배출하였다.

## 2) 정당별 여성공천 및 당선 현황

### (1) 정당의 지역구 의회(광역-기초) 여성 후보공천 및 지방의회 진출

제5회 지방선거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광역의회가 680개소 680명이고 기초의회가 1039개소 2512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의회에서 여성 총 154명이 입후보하여 55명이 당선되었고, 기초의회에서 552명을 공천하여 274명이 당선되었다. 이 중에서 무소속을 제외하면, 광역과 기초의회에서 정당이 각각 130명과 484명을 공천하여, 각각 54명과 265명을 당선시켰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민주당이 63.4%에 달하는 여성후보 당선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이 37.7%, 민주노동당이 36.8%의 당선율을 보였다. 이는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인 35.7%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75.2%의 당선율을 보였으며, 한나라당이 60.2%, 민주노동당은 33.8%의 당선율을 보였다. 기초의회의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은 49.6%이다.

총 여성 후보자 당선율을 남성후보자 당선율과 비교해보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초의회의 경우는 여성(49.6%)이 남성(42.5%)보다 당선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한나라당	53	20	37.7	191	115	60.2
민주당	41	26	63.4	149	112	75.2
자유선진당	3	0	0.0	12	5	41.7
민주노동당	19	7	36.8	77	26	33.8
창조한국당	0	0	0.0	1	1	100.0
진보신당	5	1	20.0	25	5	20.0
국민중심연합	1	0	0.0	2	0	0.0
국민참여당	3	0	0.0	12	0	0.0
미래연합	3	0	0.0	9	0	0.0
사회당	0	0	0.0	1	0	0.0
친박연합	1	0	0.0	3	1	33.3
평화민주당	1	0	0.0	2	0	0.0
무소속	24	1	4.2	68	9	13.2
합계(여성)	154	55	35.7	552	274	49.6
남성	1610	615	38.2	5271	2238	42.5

구체적으로 정당별 공천자수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수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53명)했으며, 그 다음이 41명을 공천한 민주당이다. 당규에 여성후보를 일정 비율 공천하게끔 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각각 19명과 5명을 입후보자로 내세웠다. 총 572명의 공천자를 선정한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후보자가 9.2%의 비율을 차지했고, 민주당의 경우도 비슷하게 총 450명 공천자 중 9.1%를 여성후보자로 선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총 73명을 공천하였고, 이 중 26%에 해당하는 19명의 여성을 추천하였으며, 진보신당의 경우도 총 26명을 공천한 가운데 5명(19.2%)을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광역의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적으로는 한나라당(191명), 민주당(149명), 민주노동당(77명), 진보신당(25명) 순을 보여주는 데 비해, 총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민주노동당이 34.4%로 가장 높고, 진보신당이 28.4%, 민주당 11.6%, 한나라당 10.0%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표 IV-4>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정당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한나라당	572	53	9.3	1,902	191	10.0
민주당	450	41	9.1	1,285	149	11.6
자유선진당	78	3	3.8	241	12	5.0
민주노동당	73	19	26.0	224	77	34.4
창조한국당	5	0	0.0	6	1	16.7
진보신당	26	5	19.2	88	25	28.4
국민중심연합	14	1	7.1	32	2	6.3
국민참여당	47	3	6.4	140	12	8.6
미래연합	37	3	8.1	87	9	10.3
친박연합	17	1	5.9	47	3	6.4
평화민주당	11	1	9.1	27	2	7.4
무소속	432	24	5.6	1,737	68	3.9

광역의회 지역구 선출에서, 지역별-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후보자를 낸 경기지방의 경우, 한나라당이 15명을 공천하여 3명을 당선시켰고, 민주당이 14명을 공천하여 7명을 당선시켰다. 경기지방에서 당선된 총 12명의 여성 중 두 당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1명씩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경기지방 다음으로 많은 후보자를 낸 서울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14명을 공천하여 1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고, 한나라당이 10명을 공천하여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울지역 총 당선인 13명 모두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표 IV-5> 광역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무소속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10	3	14	10	1	·	3	·	·	·	·	·	·	1	·	·	·	·	·	·	·	·	·	·	·	
부산	2	1	1	·	·	·	1	·	1	·	·	·	·	·	·	·	·	·	·	·	·	·	1	1	6	2
대구	5	5	·	·	·	·	·	·	·	·	·	·	·	·	·	·	1	·	·	·	·	·	2	·	8	5
인천	2	·	2	2	·	·	·	·	·	·	·	·	·	·	·	1	·	·	·	1	·	·	·	·	6	2
광주	·	·	1	1	·	·	2	1	·	·	·	·	·	·	·	·	·	·	·	·	·	·	3	·	6	2
대전	3	·	1	1	1	·	·	·	1	·	1	·	·	·	·	·	·	·	·	·	·	·	1	·	8	1
울산	2	1	·	·	·	·	4	3	·	·	·	·	·	·	·	·	·	·	·	·	·	·	·	·	6	4
경기	15	3	14	7	·	·	3	1	1	1	·	·	2	·	·	·	·	·	·	·	·	·	2	·	37	12
강원	2	1	2	2	·	·	1	·	·	·	·	·	·	·	·	·	·	·	·	·	·	·	1	·	6	3
충북	1	·	1	1	·	·	·	·	·	·	·	·	·	·	·	1	·	·	·	·	·	·	1	·	4	1
충남	1	·	1	1	1	·	·	·	·	·	·	·	·	·	·	·	·	·	·	·	·	·	·	·	3	1
전북	·	·	·	·	·	·	1	1	1	·	·	·	·	·	·	·	·	·	·	·	·	·	1	·	3	1
전남	·	·	1	1	·	·	1	·	·	·	·	·	·	·	·	·	·	·	·	·	·	·	3	·	5	1
경북	4	4	·	·	·	·	·	·	·	·	·	·	·	·	·	1	·	·	·	·	·	·	2	·	7	4
경남	3	2	1	·	·	·	3	1	1	·	·	·	·	·	·	·	·	·	·	·	·	·	1	·	9	3
제주	3	·	2	·	·	·	·	·	·	·	·	·	·	·	·	·	·	·	·	·	·	·	·	·	5	0
합계A	53	20	41	26	3	0	19	7	5	1	1	0	3	0	3	0	1	0	1	0	1	0	24	1	154	55
정당전체B	572	252	450	328	78	38	73	18	26	3	14	0	47	3	37	1	17	1	11	0	432	36	1,764	680		
비율(%) A/B	9.3	7.9	9.1	7.9	3.8	0.0	26.0	33.9	19.2	33.3	7.1	0.0	6.4	0.0	8.1	0.0	5.9	0.0	9.1	0.0	5.6	2.8	8.7	8.1		

기초의회 지역구 선출에서, 지역별-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후보자를 낸 서울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이 47명을 공천하여 34명을 당선시켰고, 민주당이 41명을 공천하여 30명을 당선시켰다. 서울지역에서 당선된 총 68명의 여성 중 두 당에서 6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진보신당이 2명, 민주노동당이 1명, 무소속이 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은 후보자를 낸 경기지방의 경우, 한나라당이 41명을 공천하여 25명의 당선인을 배출했고, 민주당이 38명을 공천하여 3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경기지방 총 당선인 64명 중, 두 당에서 55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고,

민주노동당에서 6명, 진보신당이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인  
을 배출하였다.

<표 IV-6> 기초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무소속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47	34	41	30	2	·	12	1	·	·	10	2	·	·	4	·	2	·	·	·	·	·	·	·	·	·	·	17	1	13	68
부산	20	12	6	5	·	·	5	2	·	·	1	·	·	·	·	·	1	·	·	·	·	·	·	·	·	·	3	·	36	19	
대구	10	9	1	1	·	·	·	·	·	·	·	·	·	·	·	·	2	·	·	·	2	1	·	·	·	·	5	1	20	12	
인천	12	6	10	7	·	·	3	2	·	·	1	·	·	·	·	·	·	·	·	·	·	·	·	·	·	·	·	·	26	15	
광주	·	·	12	9	·	·	3	3	·	·	·	·	·	·	1	·	·	·	·	·	·	·	·	·	·	·	1	·	17	12	
대전	6	3	3	3	3	3	1	·	·	·	·	·	·	·	·	·	·	·	·	·	·	·	·	1	·	2	·	16	9		
울산	4	2	·	·	·	·	3	3	·	·	·	·	·	·	·	·	·	·	·	·	·	·	·	·	·	·	·	·	7	5	
경기	41	25	38	30	·	·	31	6	1	1	7	1	·	·	6	·	1	·	·	·	·	·	·	·	·	·	8	1	13	64	
강원	9	5	5	3	·	·	·	·	·	·	·	·	·	·	·	·	·	·	·	·	·	·	·	·	·	·	8	2	22	10	
충북	9	5	5	5	·	·	2	·	·	·	·	·	·	·	·	·	1	·	1	·	·	·	·	·	·	·	2	·	20	10	
충남	6	1	4	3	7	2	·	·	·	·	·	·	2	·	·	·	·	·	·	·	·	·	·	·	·	·	3	·	22	6	
전북	·	·	13	8	·	·	3	1	·	·	1	·	·	·	1	·	·	·	·	·	·	·	·	1	·	4	1	23	10		
전남	1	·	8	5	·	·	6	3	·	·	1	·	·	·	·	·	·	·	·	·	·	·	·	·	·	·	4	2	20	10	
경북	14	7	1	1	·	·	2	·	·	·	1	1	·	·	·	·	1	·	·	·	·	·	·	·	·	·	8	1	27	10	
경남	12	6	2	2	·	·	6	5	·	·	3	1	·	·	·	·	1	·	·	·	·	·	·	·	·	·	3	·	28	14	
합계A	191	115	149	112	12	5	77	26	1	1	25	5	2	0	12	0	9	0	1	0	3	1	2	0	0	68	9	55	27	4	
장기전체B	190	108	128	87	24	95	224	90	6	1	88	22	32	2	140	17	87	10	7	0	47	12	27	0	173	305	582	251	2		
비율(% A/B	10.0	10.6	11.6	12.9	5.0	5.3	34.4	28.9	16.7	100.0	28.4	22.7	6.3	0.0	8.6	0.0	10.3	0.0	14.3	0.0	6.4	8.3	7.4	0.0	3.9	3.0	9.5	10.9			

(2) 정당의 비례대표(광역-기초) 여성 후보공천 및 지방의회 진출

제5회 지방선거 결과, 총 81명의 당선인 중 58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며, 71.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제 4회와 비교시, 수적으로는 1명 증가하였고, 비율은 1.5%p 감소하였다.

총 179명의 여성 후보자 중,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47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민주당 31명, 민주노동당 22명 등을 선정하였다. 총 58명의 여성 당선인 중, 한나라당이 26명, 민주당이 20명, 민주노동당이 6명 등의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표 IV-7> 광역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6	3	4	3	1	·	3	·	1	·	1	·	1	·	1	·	1	·	1	·	2	6			
부산	3	2	1	1	·	·	1	·	1	·	1	·	·	·	1	·	·	·	·	·	·	·	8	3	
대구	2	1	1	·	1	·	1	·	1	·	1	·	1	·	1	·	2	1	·	·	·	·	11	2	
인천	2	1	2	2	1	·	1	·	1	·	1	·	·	·	1	·	·	·	·	1	·	·	10	3	
광주	2	·	2	1	·	·	1	1	1	·/	2	·	·	·	1	·	·	·	·	1	·	·	10	2	
대전	3	1	2	1	1	1	1	·	1	·	1	·	·	·	1	·	·	·	·	1	·	·	11	3	
울산	3	2	·	·	·	·	1	1	1	·	1	·	1	·	1	·	·	·	·	·	·	·	·	8	3
경기	6	3	5	3	1	·	1	·	1	·	2	1	1	·	1	·	·	·	·	·	·	·	·	18	7
강원	3	2	1	1	·	·	1	·	1	·	1	·	·	·	1	·	·	·	·	·	·	·	·	8	3
충북	2	1	1	1	1	·	1	·	1	·	1	·	1	·	1	·	·	·	·	·	·	·	·	9	2
충남	1	1	1	1	2	1	2	·	1	·	1	·	1	·	1	·	·	·	·	·	·	·	·	10	3
전북	1	1	2	1	·	·	1	1	1	·	1	·	·	·	1	·	·	·	·	1	·	·	·	8	3
전남	2	1	3	2	·	·	2	1	1	·	1	·	·	·	1	·	·	·	·	2	·	·	·	12	4
경북	2	2	1	1	·	·	1	·	1	·	1	·	1	·	1	·	1	1	·	·	·	·	·	9	4
경남	5	3	2	1	1	·	3	1	1	·	1	·	·	·	1	·	1	·	·	·	·	·	·	15	5
제주	4	2	3	1	·	·	1	1	1	·	1	1	·	·	1	·	·	·	·	1	·	·	·	12	5
합계	47	26	31	20	9	2	22	6	16	·	18	2	7	·	16	·	5	2	8	·	·	·	·	179	58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는 제4회 지방선거 실시년도인 2006년부터 실시되었다. 제 4회에서는 총 375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327명으로 87.2%를 차지하였다. 이번 선거인 제 5회에서는 총 376명의 당선인 중 352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며, 93.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적으로는 25명이 증가하였고, 6.4%p 증가하였다.

제일 많은 기초의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총 311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하여 150명의 여성당선인을 배출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방에 52명, 서울지역이 40명, 경북과 경남에 각각 38명 등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경기지방에서 22명, 서울지역에서 24명, 경북에서 24명, 경남에서 21명 등의 여성 당선인을 배출하였다.

다음으로 142명의 여성 당선인을 배출한 민주당은 총 203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서울지역에 36명, 경기지역에 31명, 전남에 29명, 전북에 22명 등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서울지역에서 27명, 전남에서 23명, 경기지방에서 21명, 전북에서 14명 등 총 142명의 여성당선인을 배출했다.

75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정했던 민주노동당은 25명의 당선인을 배출하였고, 47명의 여성후보자를 선정했던 자유선진당은 2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표 IV-8> 기초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40	24	36	27	11	·	6	·	1	·	8	·	·	·	9	·	·	·	·	·	·	·	1	·	112	51	
부산	25	16	10	8	·	·	16	·	·	·	·	·	·	·	2	·	·	·	·	·	·	·	·	·	·	53	24
대구	14	9	2	·	·	·	·	·	·	·	·	·	·	·	1	·	·	·	·	4	4	·	·	·	·	21	13
인천	17	7	9	7	·	·	1	1	·	·	·	·	·	·	·	·	·	·	·	·	·	·	·	·	·	27	15
광주	·	·	9	5	·	·	4	4	·	·	·	·	·	·	4	·	·	·	·	·	·	·	·	·	·	17	9
대전	5	·	5	4	5	3	·	·	·	·	·	·	·	·	·	·	·	·	·	·	·	·	·	·	·	15	7
울산	9	3	1	·	·	·	5	4	·	·	1	·	·	·	·	·	·	·	·	·	·	·	·	·	·	16	7
경기	52	22	31	21	3	·	9	1	·	·	2	·	·	·	8	5	4	·	·	·	·	·	·	·	·	109	49
강원	29	14	12	8	1	·	2	·	·	·	·	·	·	·	·	·	·	·	·	·	·	·	·	·	·	44	22
충북	18	4	11	9	4	3	1	·	·	·	1	·	·	·	·	·	5	·	·	·	·	·	·	·	·	40	16
충남	19	4	14	7	20	15	3	·	·	·	1	·	1	·	·	·	·	·	·	1	·	·	·	·	·	59	26

전북	5	2	22	14	·	·	5	3	·	·	3	·	·	·	5	1	·	·	·	·	1	·	41	20
전남	2	·	29	23	·	·	9	6	·	·	·	·	·	·	4	·	·	·	·	·	4	·	48	29
경북	38	24	6	4	1	·	4	1	·	·	2	·	·	·	4	·	3	1	2	2	·	·	60	32
경남	38	21	6	5	2	·	10	5	·	·	4	·	·	·	2	1	2	·	3	·	·	·	67	32
합계	311	150	203	142	47	21	75	25	1	·	22	·	1	·	39	7	14	1	10	6	6	·	729	352

### (3) 정당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공천 및 당선 현황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이 1명, 진보신당이 2명을 공천하였으나, 아쉽게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서울지역에 한명숙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였다. 진보신당은 광주와 울산에 각각 1명씩 여성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총 228명의 기초단체장 중 여성 당선인은 6명으로 아주 작은 2.6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 4회와 비교하여 2배 증가한 것으로 여성계에서는 괄목할 약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선인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에 여성 후보자를 전략 공천함으로써, 서울 강남구 신연희 후보, 서울 송파구 박춘희 후보, 부산 중구 김은숙 후보, 부산 사상 송숙희 후보, 대구 중구 윤순영 후보 등 5명을 당선시켰다. 이들 중 부산 중구 김은숙 후보와 대구 중구 윤순영 후보는 재선되었다. 민주당 역시 전략공천하였으며, 인천 부평구에서 홍미영 후보를 당선시켰다.

<표 IV-9> 정당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및 당선 현황

정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한나라당	0	0	0.0	8	5	62.5
민주당	1	0	0.0	2	1	50.0
자유선진당	0	0	0.0	0	0	0.0
민주노동당	0	0	0.0	1	0	0.0
창조한국당	0	0	0.0	0	0	0.0
진보신당	2	0	0.0	3	0	0.0
국민중심연합	0	0	0.0	0	0	0.0

진국당	0	0	0.0	0	0	0.0
국민참여당	0	0	0.0	0	0	0.0
국제녹색당	0	0	0.0	0	0	0.0
미래연합	0	0	0.0	0	0	0.0
사회당	0	0	0.0	0	0	0.0
자유평화당	0	0	0.0	0	0	0.0
친박연합	0	0	0.0	0	0	0.0
평화민주당	0	0	0.0	2	0	0.0
무소속	0	0	0.0	10	0	0.0
합계	3	0	0.0	26	6	23.1
남성 당선율	52	16	30.8	723	222	30.7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여성 후보자가 나왔으며, 그 중 2명의 당선인이 배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 및 경기에서 각각 3명씩의 여성 후보자가 나왔고 그 중 부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전남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나왔으나,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남에서 각각 1명씩의 여성 후보자가 나왔으나, 대구에서 1명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당선인이 없다.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북에서는 여성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표 IV-10>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후보 자	여자	10	3	1	3	1	0	0	3	0	0	1	1	2	0	1	26
	전체 (%)	88 (11.4)	44 (6.8)	22 (4.5)	32 (9.4)	17 (5.9)	20 (0.0)	15 (0.0)	103 (2.9)	53 (0.0)	41 (0.0)	68 (1.5)	46 (2.2)	66 (3.0)	65 (0.0)	69 (1.4)	749 (3.5)
당 선 자	여자	2	2	1	1	0	0	0	0	0	0	0	0	0	0	0	6
	전체 (%)	25 (8.0)	16 (12.5)	8 (12.5)	10 (10.0)	5 (0.0)	5 (0.0)	5 (0.0)	31 (0.0)	18 (0.0)	12 (0.0)	16 (0.0)	14 (0.0)	22 (0.0)	23 (0.0)	18 (0.0)	228 (2.6)

### 3) 재선이상 지방의회 여성의원

인천 부평구 홍미영 기초단체장 후보는 인천 구의원과 시의원,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쳐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었다. 홍미영 당선인의 사례는 구

의원으로 시작하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으로 경력을 확대해 나간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경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우 재선 이상에서는 대부분 비례보다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더 많았다. 광역의회에서 비례가 3명의 재선의원을 배출시킨 데 비해 지역구에서 16명의 재선의원이 나왔다.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례에서는 재선의원이 7명이었던 데 비해 지역구에서 120명의 재선의원이 나왔다.

그러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여성의 공직 진출은 초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례의 경우는 광역과 기초 모두 90%가 넘는 비율이 초선이었다. 이는 여성공천의무할당제, 비례대표 여성 매홀수 지정제 등에 힘입어 여성 후보의 수적 증가 및 당선인 수의 증가 등으로 지방의회 및 공직자에서 여성 진출은 괄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살려 꾸준한 경력 발전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1> 재선이상 지방의회 여성의원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합계
광역의원	지역구	38(69.1)	16(29.1)	1(5.5)	0(0.0)	0(0.0)	55
	비례	55(94.8)	3(5.2)	0(0.0)	0(0.0)	0(0.0)	58
광역의원 합계		93(82.3)	19(16.2)	1(0.9)	0(0.0)	0(0.0)	113
기초의원	지역구	145(52.9)	120(43.8)	6(2.2)	2(0.7)	1(0.4)	274
	비례	343(97.7)	7(2.0)	1(0.28)	0(0.0)	0(0.0)	351
기초의원 합계		488(78.1)	127(20.3)	7(1.1)	2(0.3)	1(0.2)	625

출처: 여성신문, 2010.6.11

#### 4) 지방선거 여성진출 확대에 따른 성과 소개

공직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첫째, 공직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누가 대표하는가의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크라크(P. Bachrach)는 여성의 저대표성은 인구의 반을 공적 이익의 반영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기회의 균등이나 다수결 원칙, 인간존중 등,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여성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친화적 정책(woman friendly policies)의 수립에 근거하는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수적인 균형을 이루는 기술적 대표성에서 더 나아가 실제 여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상징적인 대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친화적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대표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건강,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비교적 여성과 밀접한 역할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들의 시각이나 판단력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직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의 확대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직 부문에서 남성중심의 부정적인 관행이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여성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민주화 및 부정부패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수화 되고 있다.

2002년 Caiazza가 미국 50개 주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수와 여성 친화적 정책 수립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가 동수로 의회에 진출하면 가능한 여성 친화적 점수가 75%까지 상승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김원홍외 2인: 2009).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의회

기초의회 여성의원비율은 2002년 2.2%에서 2006년 15.1%로 증가했다. 제4대 의회와 비교하여 제5대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은 본회의와 상임위의 의사결정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대 기초의회에서 의장직에는 여성의원이 없었고 단지 부의장직에 1명만이 활동한 반면, 제5대 기초의회에서는 여성의원은 의장직에 4명, 부의장직에 5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여성은 제4대 기초의회의 4명(3.9%)에서 제5대 12명(10.7%)으로 증가하였으며 상임위의 경우도 제4대에서 여성위원장의 경우 9명(3.3%), 간사 10명(3.6%)이었던 것이, 5대에서는 여성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여성의원은 26명(8.2%)이며 간사의 역할을 담당한 여성의원도 81명(25.6%)으로 늘어났다. 다음으로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양적, 질적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 발의 건수와 관련하여, 제4대 의회 대비 제5대 의회 여성의원수의 증가율은 15.4%p인데 반해 조례발의 증가비율은 17.1%p가 증가하여 제5대 의회 여성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조례 제출 건수로 살펴보면, 여성의원은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제4대 0.3건에서 제5대 1.2건으로 4.0배가 증가하였는데, 남성의원은 0.5건에서 1.3건으로 2.6배 증가에 그쳐 여성의원들의 평균조례안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4대 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인데 비해 전체 조례발의 건수는 2.9%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못 미쳐 소극적인 입법활동을 한 것에 비해, 제5대 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1.5%이고 발의 건수는 20.0%로 적극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여성의원들이 극소수였던 상황보다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2배 이상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원은 남성의원에 비해 복지 분야와 여성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복지 분야 조례에서 여성의원은 4대 의회에서 발의된 복지 분야 조례안의 14.3%를, 5대 의회에서 20.0%를 발의하였다. 여성분야는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4대 의회에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5대 의회에서는 전체 여성관련 조례의 85.7%를 여성의원이 발의하고 있다. 즉 여성의원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이를 법제화 하려는 입법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남성의원보다 더욱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여성의원들이 극소수였던 상황보다 협력과 경쟁을 통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제4대 전반기와 제5대 전반기 본회의 발언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제4대 전반기 발언 횟수 총 2,342건 중에서 2,211건은 남성의원, 131건은 여성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대 전반기 여성의원의 발언비율은 전체의 5.6%에 해당하며, 이는 1인당 평균 8.7건(131건/15명) 발언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제4대 남성의원들은 1인당 평균10.4건(2,211건/212명)을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대 전반기 발언 횟수는 총 2,422건이며, 이 중 1,928건은 남성의원이, 494건은 여성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대 전반기 여성의원의 발언비율은 전체의 20.4%에 해당하며, 이는 1인당 평균 11.2건(494건/44명)을 발언한 것이다. 제5대 남성의원들은 1인당 평균12.4건(1,928건/156명)을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원 수가 증가한 5대 전반기 본회의에서 여성의원의 발언이 제4대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남성의 평균 발언 건수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Kanter가 제시하였듯이 15% 수준의 여성의원수로는 어느 정도 영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향후 여성의원의 숫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원의 증가는 남성의원의 여성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회의 여성정책관련 성별 발언횟수를 살펴보면, 4대 여성의원 발언횟수의 과반수 이상(57.1%)이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원의 여성의 권익증진(29.4%),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23.5%)와 비교할 때 우선하고 있었다. 5대 여성의원들은 여성고용 촉진과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발언을 하였다. 5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상의 남녀차별 해소와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언횟수가 남녀의원들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매매 관련 발언이나 출산관련 발언횟수도 여성의원보다 남성의원이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사회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 내 양성평등사회를 다소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원 증가 영향으로 남성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여성지방자치단체장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성 참여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배출될 경우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현재 여성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전체 230명중 5명이 있었는데 언론들은 여성구청장들이 잘한 일로 ①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 승진 증가를 통한 행정의 질적 변화(능력에 비해 승진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하던 여성공무원들이 대거 승진함으로써 남녀 균등한 시각이 잡힌 행정이 가능해지고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역차별이라는 생각들은 하지 않음), ②여성의 특성에 맞는 살림정치, 생활정치의 실현(중구는 옛 도심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여성의 돌봄적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음). ③ 복잡한 이해관계로 부터의 자유(남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맥, 이해관계에 얽힌 것이 적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원칙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대구 동승로 노점상 철거에 대한 주변 평가>), ④ 직원들의 창조, 자율성 제고(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 다각화, 저예산 사업 발굴), ⑤환경, 문화, 건강 등의 테마사업 시행 등을 꼽고 있었다.

한 예로 여성구청장인 송과구청장이 이루어온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친화도로조성, 생리기간 중 수영장여성이용료 할인, 아토피없는 어린이집, 주차장내 여성우선주차구획, 여성전용주차장 핑크존, 이용시간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화장실건립, 1동 1공공시설확충, 안전도시구축 중 특별히 어머니들의 관심사인 어린이안전정책추진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쳤고,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기본인식하에 산전산후 건강교실, 여성사랑맞춤형 건강관리, 중년기 여성건강교실 등을 운영

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200여개의 전문직업프로그램과 여성지도자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평가되어 2008년 『여성지위향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leading city 역할을 해 내고 있다.

## 2. 2010 6.2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별 여성참여 현황

### 1) 강원도<sup>10)</sup>

2010년 6.2지방선거 이전까지 강원도 여성의 지방선거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면 <표 IV-12>과 같다. 역대 지방선거(민선 1~5기)여성 후보 및 당선자를 선거수준별로 살펴보면, 우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출마후보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전국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강원도와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민선1기 0.4%, 민선3기 0.86%, 민선4기 1.3%로 여성출마 후보자가 증가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당선자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비례대표제가 공직선거법을 통해 보장되었던 강원도 광역의원의 경우, 후보출마 비율과 당선자 비율이 계속 증가해 4%대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출마의 경우는 후보자 출마와 당선자 비율이 1%대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 의석을 갖지 있지 않던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참여율은 더욱 낮았다. 민선4기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시 여성후보 당선자의 비율은 100%로 2002년 1.4%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비례대표 부분을 제외하고 지역구만을 비교하더라도 여성후보의 숫자 또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선 3기 까지 여성후보의 비율과 당선자 비율은 약 2%대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정치세력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동시에 유능한 중앙정치인을 배양할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reacy)의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 이갑숙(2010), “강원도 6. 2지방선거와 여성정치 참여”,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표 IV-12> 강원도 역대 지방선거(민선 1~5기)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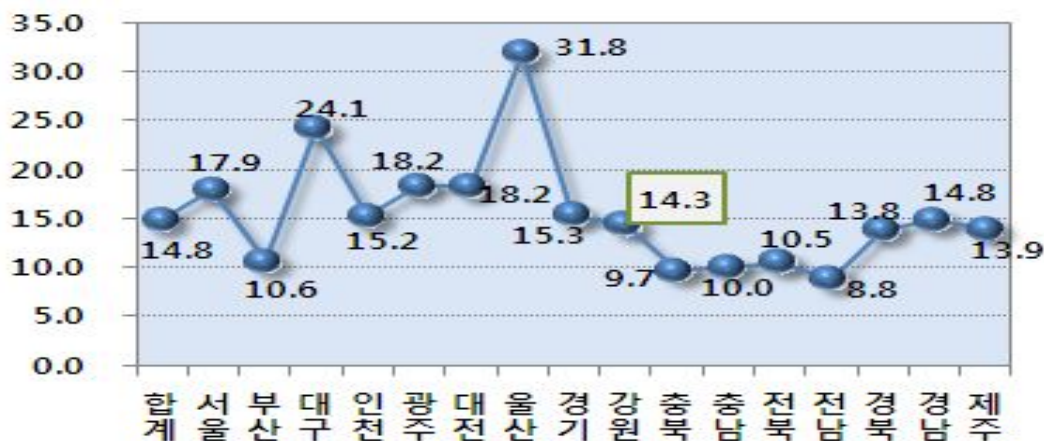
	구분	여성 후보자수	비율(%)	여성 당선자수	비율(%)	당선인수	후보자수	
1995년 (6.27)	광역단체장	0	0.0	0	0.0	1	2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87	
	광역의원	지역구	2	1.4	2	3.8	52	145
		비례	4	36.4	3	42.9	7	11
	광역의회 계	6	3.8	5	8.5	59	156	
	기초의회 계	3	0.4	0	0.0	245	747	
	총계	9	0.9	5	1.5	323	992	
1998년 (6.4)	광역단체장	0	0.0	0	0.0	1	3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56	
	광역의원	지역구	2	1.9	1	2.4	42	104
		비례	3	25.0	2	40.0	5	12
	광역의회 계	5	4.3	3	6.4	47	116	
	기초의회 계	3	0.7	0	0.0	195	446	
	총계	8	1.3	3	1.1	261	621	
2002년 (6.13)	광역단체장	0	0.0	0	0.0	1	2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63	
	광역의원	지역구	0	0.0	0	0.0	39	103
		비례	5	50.0	4	100.0	4	10
	광역의회 계	5	4.4	4	9.3	43	113	
	기초의회 계	7	1.4	1	0.5	190	491	
	총계	12	1.8	5	2.0	252	669	
2006년 (5.31)	광역단체장	0	0.0	0	0.0	1	4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65	
	광역의원	지역구	3	2.7	0	0.0	36	112
		비례	6	85.7	4	100.0	4	7
	광역의회 계	9	7.6	4	10.0	40	119	
	기초의원	지역구	16	3.1	3	2.1	146	519
		비례	50	100.0	23	100.0	23	50
기초의회 계	66	11.6	26	15.4	169	569		
총계	75	9.9	30	13.2	228	757		
2010년 (6.2)	광역단체장	0	0.0	0	0.0	1	2	
	기초단체장	0	0.0	0	0.0	18	53	
	광역의원	지역구	6	5.8	3	7.9	38	104
		비례	8	80.0	3	75.0	4	10
	광역의회 계	14	12.3	6	14.3	42	114	
	기초의원	지역구	22	5.6	10	6.8	146	395
		비례	44	95.7	22	95.7	23	46
기초의회 계	66	15.0	32	18.9	169	441		
총계	80	13.1	38	16.5	230	61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 ; <http://info.nec.go.kr>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및 투개표 조회시스템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역대의원 현황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1회 동시지방선거 총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강원도 광역의원 당선자의 여성비율을 보면(표 IV-12), 1995년에 여성이 지역구 2명, 비례 3명 총 5명(8.5%)였으며, 1998년에는 지역구 1명, 비례 2명으로 총 3명, 2002년과 2006년에는 비례에서만 각각 4명, 그리고 2010년에는 지역구 3명, 비례 3명으로 총 6명의 여성위원이 당선되었다. 1995년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의 비율은 3.8%(2명)로 전국 평균 1.4%보다 2.4%p 높았다. 이후 1998년 선거에서도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되는 등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2002년과 2006년 선거에서는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2010년 강원도 광역의원 수는 총 42명이고, 이 중 여성위원은 지난 2006년 선거보다 2명이 증가한 6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31.8%)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며, 2010년 전국 광역여성의원 평균(14.8%)에도 비해서도 낮아 전국에서 열 번째 수준이다. 강원도의 여성광역의원 수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 수준에서 볼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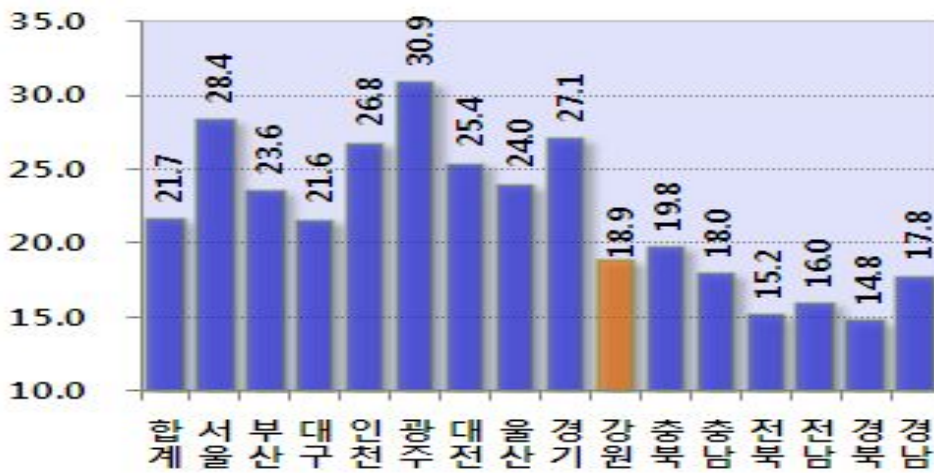
<그림 IV-1> 6.2 지방선거 광역의원 현황과 강원도



강원도 기초의회 선거결과를 보면(표 IV-12),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의원 169명 중 여성의원 수는 32명(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2명)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단위에 비하면 기초단위에서의 여성의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에 의한 여성의원비율(15.4%) 대비 3.5%p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원 비율을 감안하면, 여전히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열 번째이고, 전국 평균 21.7%보다 2.8%p 낮은 수준이다. 조직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이 지역정치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고, 평등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 IV-2> 6.2 지방선거 기초의원 현황과 강원도



2) 경기도 지방의회 여성위원의 당선자 추이<sup>11)</sup>

<표 IV-13> 경기도 역대 지방의회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의 변화

(단위 : 명, %)

구분		여성후보자수 (총후보자수)	여성후보 비율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2002	계	67 (1,607)	4.16	25 (636)	3.93	
	광역 의회	지역구	7 (230)	3.04	2 (94)	2.12
		비례대표	13 (25)	52	6 (10)	60
		합계	20 (255)	7.84	8 (104)	7.69
	기초 의회	지역구	45 (1,228)	3.66	17 (500)	3.4
		비례대표	-	-	-	-

11) 안태윤(2010), “민선 5기 지방자치와 경기도 여성의 정치세력화”,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합계	45 (1,228)	3.66	17 (500)	3.4	
	광역자치단체장	0 (3)	0	0 (1)	0	
	기초자치단체장	2 (121)	1.65	0 (31)	0	
2006	계	247 (1,812)	13.63	82 (622)	13.18	
	광역의회	지역구	31 (352)	8.8	10 (108)	9.25
		비례대표	19 (32)	59.37	7 (11)	63.63
		합계	50 (384)	13.02	17 (119)	14.28
	기초의회	지역구	89 (1,141)	7.8	18 (364)	4.94
		비례대표	103 (149)	69.12	47 (53)	88.67
		합계	192 (1,290)	14.88	65 (471)	13.80
		광역자치단체장	0 (4)	0	0 (1)	0
		기초자치단체장	5 (134)	3.73	0 (31)	0
2010	계	300 (1,450)	20.68	132 (574)	22.99	
	광역의회	지역구	37 (293)	12.62	12 (112)	10.71
		비례대표	18 (35)	51.42	7 (12)	58.33
		합계	55 (328)	16.76	19 (124)	15.32
	기초의회	지역구	133 (875)	15.2	64 (363)	17.63
		비례대표	109 (142)	76.76	49 (54)	90.74
		합계	242 (1,017)	23.79	113 (417)	27.09
		광역자치단체장	0 (2)	0	0 (2)	0
		기초자치단체장	3 (103)	2.91	0 (31)	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1) 경기도 광역의회 여성의원

<표 IV-14> 경기도의회 1대~8대 여성의원 비율

(단위 : 명, %)

대수	전체	남성	여성의원수 : 남성의원수	여성의원비율
1대(1956~1960)	45	45	0	0
2대(1960~1961)	46	46	0	0
3대(1991~1995)	117	116	1 : 116	0.9
4대(1995~1998)	148	139	9 : 139	6.1
5대(1998~2002)	109	105	4 : 105	3.7
6대(2002~2006)	116	105	11 : 105	9.5
7대(2006~2010)	98	83	17 : 102	14.3
8대(2010~2014)	124	105	19 : 105	15.3

출처: 『경기도의회사』 1997, 경기도의회정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ggc.go.kr/>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 도의회에는 여성의원이 2명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은 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민선 4기 경기도 여성 도의원 16명중 공천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의원이 6명이었고, 공천을 받은 의원이 7명이었으

니, 여성의원이 공천을 받을 확률은 50%가 안되는 셈이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중 1명은 기초의회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1명은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하였으나 역시 낙선하였다. 공천받은 의원 7명중에서는 4명이 낙선하고, 3명은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중 1명은 3선이다. 또한 여성의원중 3명은 공천신청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7대 도의원으로 당선된 17명의 여성의원중 1명은 중도 사퇴하였고, 나머지 16명중 3명만이 재선되어 의원 경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성 도의원의 18.8%에 불과하다. 여기에 6대(2002년)에서 8대(2010년) 도의회에 재선된 여성의원이 2명 있다. 남성의원은 7대 82명중 18명이 당선되어 남성 도의원의 22%가 의원 경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 3선 의원은 1명이나 남성은 5명이 3선의원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기도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재선율은 5명중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대부분의 여성의원이 의원경력의 지속을 희망하였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2) 경기도 기초의회 여성의원

<표 IV-15> 2006, 2010년 경기도 31개 시 · 군별 기초의회 여성당선자수  
(단위 : 명, %)

2006년						2010년					
지역	총 인원	여성의원 소계	지역구 여성 (남성)	비례 여성 (남성)	여성의원 비율	지역	총 인원	여성의원 소계	지역구 여성 (남성)	비례 여성 (남성)	여성의원 비율
수원시	36	4	1(32)	3(4)	11.11	수원시	34	7	5(30)	2(4)	20.58
성남시	36	7	4(32)	3(4)	11.11	성남시	34	6	4(30)	2(4)	17.64
의정부시	13	3	1(11)	2(2)	27.27	의정부시	13	6	4(11)	2(2)	46.15
안양시	24	2	0(21)	2(3)	8.33	안양시	22	6	3(19)	3(3)	27.27
부천시	30	3	1(27)	2(3)	10	부천시	29	10	7(26)	3(3)	34.48
광명시	13	2	0(11)	2(2)	15.38	광명시	12	4	2(10)	2(2)	33.33
평택시	16	2	0(14)	2(2)	12.5	평택시	15	3	1(13)	2(2)	20
양주시	7	1	0(6)	1(1)	14.28	양주시	7	1	0(6)	1(1)	14.28
동두천시	7	1	0(6)	1(1)	14.28	동두천시	7	2	1(6)	1(1)	28.57
안산시	22	4	1(19)	3(3)	18.18	안산시	21	5	2(18)	3(3)	23.80
고양시	31	5	3(27)	2(4)	16.12	고양시	31	11	8(27)	3(3)	35.48

과천시	7	1	0(6)	1(1)	18.18	과천시	7	2	1(6)	1(1)	28.57
의왕시	7	1	0(6)	1(1)	18.18	의왕시	7	1	0(6)	1(1)	14.28
구리시	7	1	0(6)	1(1)	18.18	구리시	7	3	2(6)	1(1)	42.85
남양주시	14	2	0(12)	2(2)	14.28	남양주시	14	4	2(12)	2(2)	28.57
오산시	7	2	1(6)	1(1)	28.57	오산시	7	3	2(6)	1(1)	42.85
화성시	11	2	0(9)	2(2)	18.18	화성시	17	5	3(15)	2(2)	29.41
시흥시	13	3	1(11)	2(2)	23.07	시흥시	12	4	2(10)	2(2)	33.33
군포시	9	2	1(8)	1(1)	22.22	군포시	9	1	0(8)	1(1)	11.11
하남시	7	3	2(6)	1(1)	42.85	하남시	7	4	3(6)	1(1)	57.14
파주시	10	1	0(9)	1(1)	10	파주시	11	3	1(9)	2(2)	27.27
여주군	7	1	0(6)	1(1)	18.18	여주군	7	1	0(6)	1(1)	14.28
이천시	9	2	1(8)	1(1)	22.22	이천시	9	2	1(8)	1(1)	22.22
용인시	20	3	1(18)	2(2)	15	용인시	24	5	3(22)	2(2)	20.83
안성시	9	1	0(8)	1(1)	11.11	안성시	9	4	3(8)	1(1)	44.44
김포시	8	1	0(7)	1(1)	12.5	김포시	8	2	1(7)	1(1)	25
광주시	8	1	0(7)	1(1)	12.5	광주시	8	3	2(7)	1(1)	37.5
포천시	8	1	0(7)	1(1)	12.5	포천시	8	2	1(7)	1(1)	25
연천군	7	1	0(6)	1(1)	18.18	연천군	7	1	0(6)	1(1)	14.28
양평군	7	1	0(6)	1(1)	18.18	양평군	7	1	0(6)	1(1)	14.28
가평군	7	1	0(6)	1(1)	18.18	가평군	7	1	0(6)	1(1)	14.28
합계	417	65	18(364)	47(53)	15.58	합계	417	113	64(364)	49(53)	29.09

2006년 기초의회 : 18/364 (4.94%) / 2006년 기초비례 : 47/53 (88.67%)  
2010년 기초의회 : 64/363 (17.63%) / 2010년 기초비례 : 49/54 (90.74%)  
2006년 기초의회 전체비율 : 65/417 (15.58%)  
2010년 기초의회 전체비율 : 113/417 (27.0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기초의회 여성위원의 수는 2002년 17명(여성의원 비율 3.4%)에서 2006년 65명(15.6%), 2010년에는 113명(27.1%)으로 증가했다. 기초위원의 경우 2006년 민선 4기에 기초의회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되어 그 영향으로 여성위원의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었다. 2010년 당선된 113명 중 재선 이상이 24명이 고, 이 중 3선의원이 3명 생겨났다.<sup>12)</sup> 기초의회 여성위원의 재선율은 36.4%로 광역의회의 두 배에 가깝다. 기초의회 남성의원의 경우, 406명중 118명이 재선에 성공하여 재선율은 29.1%이다.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 달리, 여성위원의 재선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의무공천제’가 새로이 도입되어 지역구 광역 · 기초의원 공천때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공직

12) 기초의회 3선 의원은 의정부시 빈미선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박윤희의원(민주당), 하남시 홍미라의원(민노당)이다.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지역구 여성후보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의무공천제가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이 11.5%p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선 4기에는 여성의원의 수가 30%를 넘는 기초의회는 하남시 한 곳이었지만, 민선 5기에는 여성의원의 증가로 무려 10개의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이 30%를 넘게 되었다.

### 3) 경북지역<sup>13)</sup>

#### (1)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경북지역의 6.2 지방선거 여성당선자는 총 50명(14.6%, 전년대비 1.9%P 증가)으로, 광역의원 8명(지역구 4명, 비례 4명), 기초의원 42명(지역구 10명, 비례 32명)이었다. 여성후보자는 103명(13.6%)으로 절반 정도가 당선(당선율 48.5%)되었으나, 시장이나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 도전한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감, 교육위원의 경우도 여성후보자가 없었다.

<표 IV-16> 6.2 지방선거 경북지역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개괄

	전체	기초자치 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감	교육 위원
			계	지역구	비례	계	지역구	비례		
후보자	103	-	16	7	9	87	27	60	-	-
당선자	50	-	8	4	4	42	10	32	-	-

#### (2) 6.2 지방선거 여성의 의회진출과 특징

전체적으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늘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여성후보자의 경우 '95년 3명(0.2%), '98년 4명(0.5%), '02년 19명(2.1%), 06년 93명(8.3%)에

13) 김명화(2010), "6. 2 지방선거와 경북여성의 정치참여",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완하였다.

서 2010년 103명(13.6%)으로 증가하였다. 여성후보자는 1995년 3명에서 1998년 4명으로 1%의 비율을 차지하며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2년 19명(2.1%)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과 중선거구제 실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06년 93명으로(8.3%)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가 도입된 이번 선거에서도 제도적 도움에 힘입어 103명(13.6%)이 입후보하여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넘기게 되었다.

여성당선자 현황을 보면, '95년 1명(0.2%), '98년 1명(0.3%), '02년 8명(2.0%), '06년 43명(12.7%), '10년 50명(14.6%)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당선자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명, 1998년 1명에서 2002년 8명으로 증가하고 2006년엔 43명이 당선됨으로써 1998년에 비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50명이 당선되어 소폭 상승하였다.

<표 IV-17> 연도별 경북지역 입후보 및 당선자 현황

	구분	후보자수			당선자수			
			여성수	여성비율(%)		여성수	여성비율(%)	
1995년 (6.27)	광역의회 계	215	1	0.5	84	-	-	
	기초의회	1,703	2	0.2	339	1	0.3	
	총계	1,918	<b>3</b>	<b>0.2</b>	423	<b>1</b>	<b>0.2</b>	
1998년 (6.4)	광역의회 계	135	1	0.7	54	-	-	
	기초의회 계	660	3	0.5	342	1	0.3	
	총계	795	<b>4</b>	<b>0.5</b>	396	<b>1</b>	<b>0.3</b>	
2002년 (6.13)	광역의원	지역구	115	0	0.0	51	0	0.0
		비례	15	8	53.3	6	4	66.7
	광역의회 계	130	8	6.2	57	4	7.0	
	기초의회 계	787	11	1.4	339	4	1.2	
	총계	917	<b>19</b>	<b>2.1</b>	396	<b>8</b>	<b>2.0</b>	
2006년 (5.31)	광역의원	지역구	146	3	2.1	50	1	2.0
		비례	11	7	63.6	5	4	80.0
	광역의회 계	157	10	6.4	55	5	9.1	
	기초의원	지역구	867	17	2.0	247	7	2.8
		비례	93	66	71.0	37	29	78.4

	기초의회	계	960	83	8.6	284	36	12.7	
	총계		1117	<b>93</b>	<b>8.3</b>	339	<b>43</b>	<b>12.7</b>	
2010년 (6.2)	광역의원	지역구	126	7	5.6	52	4	7.7	
		비례	17	9	52.9	6	4	66.7	
	광역의회		계	143	16	11.2	58	8	13.8
	기초의원	지역구	531	27	5.1	247	10	4.0	
		비례	81	60	74.0	37	32	86.4	
	기초의회		계	612	87	14.2	284	42	14.8
	총계			755	<b>103</b>	<b>13.6</b>	342	<b>50</b>	<b>14.6</b>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비록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 후보자나 당선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숫적으로는 매우 소수이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 342명 중 여성은 50명에 불과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도 여전히 저조한 수준인데, 지방의원에 당선된 여성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북의 여성 당선자 비율은 전국평균인 20.3%보다도 5.7%p 낮은 14.6%로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가장 낮은 제주 13.9%, 전북 14.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성의 의회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역구 진출보다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대다수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전년도 5명으로 비례 4명, 지역구 1명이 당선되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8명이 당선되었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여성은 4명으로 동일하지만, 지역구에서 4명이 당선됨으로써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구에서의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당선자 42명 중 지역구는 10명에 불과하다. 3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84%가 초선이어서, 여성의원의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여성당선자 8명 중 6명(75.0%)이 초선이었고, 기초의회의 경우 42명 중 35명(83.3%)가 초선이었다. 비례의 경우 광역의회 100%, 기초

의회 96.9%가 초선이였다.

<표 IV-18> 6.2 지방의원선거 경북의 여성당선자 분포 (선수별)

		초선	재선	3선	계
광역의회	지역구	2	1	1	4
	비례	4	-	-	4
	계	6	1	1	8
기초의회	지역구	4	6	-	10
	비례	31	1	-	32
	계	35	7	-	42

4) 부산<sup>14)</sup>

제5대 지방선거 부산지역 여성 당선자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6.2 지방선거 여성당선자는 총 51명으로 구청장 2명, 시의원 5명, 구의원 43명, 교육감 1명이다.

<표 IV-19> 6.2 지방선거 부산지역 여성당선자 현황

(단위 : 명)

전체	구청장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계	선출	비례	계	선출	비례		
51	2	5	2	3	43	19	24	1	0

단체장의 경우, 2002년 두 명의 여성구청장이 배출된 이후 2006년에는 여성구청장 당선자가 없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2명이 구청장으로 당선되었다.

14) 주경미(2010), "6. 2 지방선거와 부산여성의 정치참여",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완전하였음.

<표 IV-20> 부산 기초단체 구청장 여성 당선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전체	여자	남자
2002	16	2	14
2006	16	0	16
<b>2010</b>	<b>16</b>	<b>2</b>	<b>14</b>
2010년 당선자	사상구청장 : 송숙희(한나라당), 중구청장 : 김은숙(한나라당)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선출직 여성 시의원 당선자는 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 역시 3~4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IV-21> 부산 시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현황(단위 : 명)

년도	전체			여자			남자		
	계	선출	비례	계	선출	비례	계	선출	비례
2002	44	40	4	5	2	3	40	38	1
2006	47	42	5	6	2	4	41	40	1
<b>2010</b>	<b>47</b>	<b>42</b>	<b>5</b>	<b>5</b>	<b>2</b>	<b>3</b>	<b>42</b>	<b>40</b>	<b>2</b>
2010년 당선자	선출	송순임(남구, 무소속), 신숙희(사하구, 한나라당)							
	비례	이경혜(한나라당), 김름이(한나라당), 이성숙(한나라당)							

2006년에 비해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수가 증가해 총 43명이 당선되었다.



<표 IV-22> 부산 구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현황(단위 : 명)

년도	전체			여자			남자		
	계	선출	비례	계	선출	비례	계	선출	비례
2002	215			3			212		
2006	182	158	24	34	11	23	148	147	1
<b>2010</b>	<b>182</b>	<b>158</b>	<b>24</b>	<b>43</b>	<b>19</b>	<b>24</b>	<b>139</b>	<b>139</b>	<b>0</b>
2010년 당선자	선출	한나라당(12명), 민주당(5명), 민주노동당(2명)							
	비례	한나라당(16명), 민주당(8명)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전체 6명의 교육위원에 당선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표 IV-23> 교육감 여성 당선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전체	여자	남자
2006	1	0	1
<b>2010</b>	<b>1</b>	<b>1</b>	<b>0</b>
2010년 당선자	임혜경		

#### 5) 전북지역<sup>15)</sup>

##### (1)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 등 성과

6·2지방선거 결과 전북지역 여성의원은 도의원 4명, 시·군의원 30명 등 모두 34명이 당선됐다. 2006년 5·31때 28명에 비하면 6명이 늘었지만, 전북의 여성당선자 비율 14.5%는 전국 평균 20.3%보다 5.8%p 낮은 수치다. 이는

15) 허명숙(2010), “ 6. 2 지방선거, 전북 여성정치와 정치인”,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여성당선자 비율이 가장 낮은 제주의 13.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2지방선거에 전북지역에서는 총 76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했으므로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 정치인이 당선된 셈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23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새로 지방의회에 입성한 여성의원은 16명에 달한다. 여성의원의 진출로 인해 그동안 남성의원 중심으로 좌우됐던 지방정치 지형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전체 8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6명이 여성정치인이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하게 된 총 4명의 여성당선자를 보면, 2002년 3회 지방선거 이후 8년 만에 지역구 여성 광역의원 당선자가 나왔다. 오은미의원(순창)은 전라북도 34개 지역구 도의원 당선자 중 33명이 민주당 소속 남성후보이고 유일한 여성에 유일한 민주노동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지역정가에 단연 화제가 되었다. 더욱이 오의원의 상대였던 민주당과 무소속 등 3인 후보 모두 전·현직 도의원 출신이었다. 지난 91년 제4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6회에 걸친 도의원 선거를 통틀어 군소정당 출신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은미 의원은 민노당 비례대표 8대 도의원으로서 21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 쌀 직불금을 40억원 증액시킨 바 있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지역의 정치 풍토에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4년간의 공백을 깨고 배출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일한 여당(한나라당) 소속의 여성의원 진출이 전북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전북의 현안사업을 챙기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받아 전북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과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여성당직자로서 도의회에 진출하는 첫 사례를 남기게 된 정진숙 민주당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여성광역의원 이현주 의원은 한나라당, 민주당 대안세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10년 넘게 노조지부장 지낸 의원은 세밀한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참 일꾼으로서 환경노동복지위원회 상

임위 활동을 통해 일하는 여성,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고 공공의료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광역의원 4명은 전체 광역의원 38명 중 10%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특별하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지방살림을 챙기고 실생활을 위한 정책개발 뿐 아니라 유권자를 위한 소신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하다.

더불어 비례대표 몫으로만 지방의회에 입성하던 과거와 달리 상당수 여성 후보가 각 지역에서 당선됐다. 지난 2006년 지선 당시 3명에 머물던 지역구 의원 수는 1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지역구 여성 당선자들이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도심지역에 국한돼 있어 보다 폭넓은 여성들의 활약이 요구된다. 현재 지역구 여성 의원은 전주 5명, 군산 2명, 익산 2명, 정읍 1명이며, 남원과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구 여성 의원은 한명도 없다. 이들 지역에는 정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1~2명 가량 배치돼 정당 공약 및 지역 정책개발에 나섰다.

## (2) 역대 지방선거와 전북여성의원

2002년 선거 당시 지역구 광역의원 1명(박영자), 광역비례 2명(백인숙, 김민아), 기초지역 2명 등 총 5명에 불과하던 여성의원 수는 2010년 34명으로 6.8배 늘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문턱을 넘은 여성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재선이나 중도 사퇴까지 포함한다 해도 14명에 불과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회 최복래 의원이 처음으로 진출했고, 1995년 고영자, 강예순(작고) 의원이 비례대표로 광역의회에 최초 입성했다. 이때 전주시의회에도 이재천, 오정례 의원이 합류하여 사상 최초로 4명의 여성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1998년 선거에서는 김완자 의원이 비례대표로 광역의회에 들어갔고 전주시의회에 이재천, 오정례의원 외에도 박영자의원이 당선돼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선거에서는 박영자 의원이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으로서 처음 이름

을 올렸고 김민아, 백인숙의원 등이 비례대표로 합류했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함정식 의원과 익산시의회 최복래 의원이 각각 기초의회에 입성, 여성 진출의 체면을 살렸다.

2006년 선거에서는 유유순, 이영조, 오은미 의원 등 3명이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국주영(전주시), 구성은(전주시) 의원, 박정희(군산시) 의원 등 3명이 지역구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전체 24개 의석 가운데 22석을 여성이 차지했다.

여성계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해 경력을 쌓은 오정례, 김완자, 박영자 의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혹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보폭을 넓힌 것을 의미 있는 일로 꼽는다. 결과는 모두 낙선이었지만, 여성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6) 제주<sup>16)</sup>

### (1) 여성의 입후보 현황

지난 제5차 지방선거에 있어 도지사 후보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주는 여성후보자가 단 2명이 등록을 하였으나, 야권통합<sup>17)</sup>이라는 정치권의 통합으로 후보등록을 한 2명이 중간에 후보 사퇴를 하면서 최종 후보자는 3명으로 여성이 후보자로 입후보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표 IV-24> 제4차 및 제5차 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통계

(단위 : 명, %)

구분	후보자수	남	여
제4차	4	4	0
제5차	3	3	0

16) 정영태(2010), "6. 2 지방선거와 여성의제 ",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17) 당초 국민참여신당, 민주노동당에서 여성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하였으나, 민주당과 통합 단일화 후보를 내세우면서 여성입후보자가 사실상 없게 되었다.(2010.5.10. 제주 도지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발표)

도의회 선출직에 있어 여성후보 공천이 6.7%로 여성의무 공천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등록된 후보자수는 75명으로 여성후보자 5명(6.67%)이 후보등록을 하였다.

여성 후보자가 등록한 선거구는 제3선거구(일도2동을), 제10선거구(연동갑), 제15선거구(한림읍),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제25선거구(대정읍)였다. 후보등록을 한 여성 후보자의 연령은 30대 2명(40%), 40대 1명(20%), 50대 2명(40%)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제주도는 정수가 7명으로 19명이 후보등록을 하였으며, 당선자 가운데 여성이 5명으로 비례대표에 있어서 71.4%를 차지하였다.

<표 IV-25> 제5회 제주도의회 후보자 일반 성별, 연령별 통계  
(단위: 명, %)

구분	소계	성별		연령별			
		남	여	30세이상-39세이하	40세이상-49세이하	50세이상-59세이하	60세이상-69세이하
합계	75(5)	70	5	5	31	29	10
제주시	52(3)	49	3	2(2)	22(1)	19(1)	9
서귀포시	23(2)	21	2	3	9	10(1)	1
여성후보자비율	6.67	-	-	40	3.2	6.9	-

\*( )여성 후보자 수

## (2) 여성의 정치 참여 결과

앞서 여성의 참여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가운데 가장 열악한 부분이 바로 정치참여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출직 여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의회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역시 지역구의원으로서 입후보를 하였으나,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표 IV-26>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및 당선자(2002, 2006, 2010)

(단위: 명)

지역	광역단체장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2002	제주특별자치도	3	0	1	0
	전국	16	0	16	0
2006	제주특별자치도	3	0	1	0
	전국	66	4	16	0
2010	제주특별자치도	3	0	1	0
	전국	55	3	16	0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 입후보자중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은 없다. 다만 비례대표 등록후보자가 19명 있었는데 이중 여성 후보자 5명이 당선되었다.

<표 IV-27> 지방의회 당선자(2002, 2006, 2010)

(단위: 명)

구분	당선자수			
	계	여자	비율	
2002	제주특별자치도선출직	13	0	0
	제주특별자치도비례대표	3	2	66.7
2006	제주특별자치도선출직	29	0	0
	제주특별자치도비례대표	7	5	71.4
	교육의원	5	0	0
2010	제주특별자치도선출직	29	0	0
	제주특별자치도비례대표	7	5	71.4
	교육의원	5	0	0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통계 DB. 재구성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비교적 활발하게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며, 18대 여성의원의 비율은 13.7%를 차지함에 따라 꾸준히 여성의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여전히 여성당선자가 없는 실정이다.

<표 IV-28>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및 당선자(17대, 18대)

(단위: 명)

	지역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17대	제주특별자치도	11	0	3	0
	전국	1,175	66	243	10
18대	제주특별자치도	5	0	0	0
	전국	1,113(188)	132(83)	245(54)	14(27)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통계 DB. 재구성

\*()는 비례대표

## V. 민선 5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

2010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3명, 자유선진당 3명, 민주노동당 6명, 진보신당 8명, 국민참여당 3명, 무소속 4명이 출마하였으며, 여성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1명이었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이 약진한 선거로 평가된다.

<표 V-1> 민선 5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구분	후보자	당선자
서울특별시	한나라당 - 오세훈 민주당 - 한명숙 자유선진당 - 지상욱 진보신당 - 노회찬 미래연합 - 석종현	한나라당 - 오세훈
부산광역시	한나라당 - 허남식 민주당 - 김정길	한나라당 - 허남식
대구광역시	한나라당 - 김범일 민주당 - 이승천 진보신당 - 조명래	한나라당 - 김범일
인천광역시	한나라당 - 안상수 민주당 - 송영길 진보신당 - 김상하 평화민주당 - 백석두	민주당 - 송영길
광주광역시	한나라당 - 정용화 민주당 - 강운태 민주노동당 - 장원섭 진보신당 - 윤난실 국민참여당 - 정찬용 평화민주당 - 조홍규	민주당 - 강운태
대전광역시	한나라당 - 박성효 민주당 - 김원웅	자유선진당 - 엄홍철



	자유선진당 - 염홍철 진보신당 - 김윤기	
울산광역시	한나라당 - 박맹우 민주노동당 - 김창현 진보신당 - 노옥희	한나라당 - 박맹우
경기도	한나라당 - 김문수 국민참여당 - 유시민 (진보신당 - 심상정)	한나라당 - 김문수
강원도	한나라당 - 이계진 민주당 - 이광재 민주노동당 - 엄재철	민주당 - 이광재
충청북도	한나라당 - 정우택 민주당 - 이시종 진보신당 - 김백규	민주당 - 이시종
충청남도	한나라당 - 박해춘 민주당 - 안희정 자유선진당 - 박상돈	민주당 - 안희정
전라북도	한나라당 - 정운천 민주당 - 김완주 민주노동당 - 하연호 진보신당 - 엄경석 평화민주당 - 김대식	민주당 - 김완주
전라남도	한나라당 - 김대식 민주당 - 박준영 민주노동당 - 박용두 평화민주당 - 김경재	민주당 - 박준영
경상북도	한나라당 - 김관용 민주당 - 홍의락 민주노동당 - 윤병태 국민참여당 - 유성찬	한나라당 - 김관용
경상남도	한나라당 - 이달곤 무소속 - 김두관	무소속 - 김두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당 - 고희범 무소속 - 현명관 무소속 - 우근민 무소속 - 강상주	무소속 - 우근민

1.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 내용

<표 V-2> 6.2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10대 우선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공약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서울	(10대 공약, 공약2. 보육걱정없는 서울) - 보육걱정없는 서울 (①소득하위 70%까지 무상교육으로 보육걱정 줄인다. ②집 가까이 24시간 365일 공공보육시설 확충 ③영유가 무료 예방접종 실시 ④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	- 가로등 밝기 상황과 제한적으로 CCTV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CCTV V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 관제시스템(SMART시스템 활용) 구축 (10대 공약, 공약 6.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서울) - '서울시 아동·여성 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10대 공약, 공약 6.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서울)	- 워킹맘 외조 프로젝트(10대 공약, 공약 8. 워킹맘 외조 프로젝트) - 청년 여성 중심의 사회적 기업 4,000개 (10대 공약, 공약 5. 행복한 일자리가 넘쳐나는 사회적 기업, 실시계획 中 4.)			(10대 공약, 공약 5. 틈새없는 보육지원으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 틈새없는 보육지원으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세부 공약: 0~3살 어린이의 의(醫), 식(食), 주(住)를 서울시가 책임지는 사회적 보육의 전면 실시추진
인천	- 국공립 보육시설 200개 설치 (10대 공약, 공약 8.)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 (10대 공약 6-2) -24시간 365일 인천형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을 신설·확충,(10대 공약 6-6) -고급 여성인력자원의 경제활동 지원,(10대 공약 5-5)				- 4~6살 유아 80%까지 보육시설 이용을 확대해 보육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현재 읍면동 평균 0.5개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로 확대 (10대 공약, 10-1) -'국공립어린이

		20~40대 여성 창업자 300명 을 선발 하여 CEO로 양성 (10대 공약 5-6)				집 종합 프로 젝트'를 추진 (10대 공약, 10-2)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주말, 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 (10대 공약, 5.) (① 보육 시설 확대, ②거점 보육시설 운영, ③ 지자체 단위로 보육 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육 30% 달성, (10대 공약, 2-1)</li> <li>-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의 질 개선 (10대 공약 2-2)</li> <li>- 여성일자리 디자인 (10대 공약, 4-1)</li> <li>- 안전한 경기도 실현(10대 공약, 4-2)</li> <li>- 소수자 인권 신장 (10대 공약, 4-3)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10대 여성 등 관련)</li> </ul>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콜센터를 유치하여 도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에 최적사업으로 만들 (10대 공약, 공약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중심 강원도: 공원 사업을 통한 주부와 50대 일자리 창출 (10대공약, 공약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도 공공보육 시설 전면 확대, (10대 공약, 공약 2-1)</li> <li>-공공 산후조리원 건립(10대 공약, 2-2)</li> </ul>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과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시책 추진, (10대 공약, 공약9-1)</li> <li>-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10대 공약,</li> </ul>					

	공약9-3)  -보육부담 완 화와 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보육여 건 마련,(10대 공약,공약9-2)					
대구	- 양성이 평등 한 도시를 만들 겠습니다.:여성 간부공무원 비 율 증대(10대 공약,공약 6-4)	-대구 지역 국 공립보육시설 확 대 (10대 공약, 공약 3.)				
울산				- 아동 수당,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여성일자 리 확대로 아이 와 여성이 행복 한 울산을 만들 겠습니다.:시립 여성일자리찾기 센터설치,(10대 공약, 공약5.)		-만3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10 대 공약,中 공약10.) -국공립 어린이 집을 읍면동마 다 1개씩 설치 (공약 9.)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마련,(공약 5.)
광주		- 여성의 사회 적 참여 기회 확대 및 권익 신장(10대 공 약, 공약 5.) (①(가칭)광주 여성재단 창 설, ②광주여 성통합지원센 터 개설, ③여 성지위 향상을 위한 광주시 조례 제·개정)				- 복지부시장을 두고, 시장 직속 으로 ‘차별시정 평등위원회’를 설 치하여 성. 계층.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공약 4)  -국공립보육시설 동마다 3개씩 확 대, 직장보육시설 을 확대 (공약 10)
대전	-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맞 춤형 일자리 사 업 (공약 3.)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공 약 4.)	- 의무교육 수 준의 영유아보 육 확대 지원 (공약 3.)			- 내집앞 국공 립 어린이집 (공약4)
충북		- 도내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센				

		터 설치 (공약 7.)				
충남			- 여성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공약 2.) -저 출산 해소 및 복지를 위한 탁아, 육아 지원 (공약 1)			
전남		- 출산 장려금 확대, (공약 10.)				
전북		-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돕는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을 실시.(공약 10)				
경남	-여성·보육 지원시스템 구축 (시군구 보육 정보센터 활성화), (공약 5-4)					
경북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기반 조성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60억 조성, 해피우먼 프로그램) (공약 5-3)	-여성, 장애인 친화지수 공공발주 PQ 제도 도입(공약4-2)			-보육 시설 확대, 거점 보육시설 운영, 지자체 단위로 보육 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공약 7.)	
제주		-0~5세 아동 전체에 대한 보육비 지원, 제주형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공약 3.)				

## 2.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권역별 여성정책 공약 현황

### 1) 서울

분야 별	한나라당 - 오세훈	민주당 - 한명숙	자유선진당 - 지상욱	진보신당- 노회찬
1. 가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출산,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10대공약)</li> <li>(①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li> <li>②출생 후 1년간 의료비지원.</li> <li>③출생 후 1년간 월 10만원씩 아동양육수당 지원.</li> <li>④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 1,000개로 확대.</li> <li>⑤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li> <li>⑥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li> </ul>		
2. 일과 가정 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걱정없는 서울 (10대)</li> <li>(①소득하위 70%까지 무상교육으로 보육걱정 줄인다.</li> <li>②집가까이 24시간 365일 공공보육시설 확충</li> <li>③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실시</li> <li>④ 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킹맘 외조 프로젝트</li> <li>(① 영유아와 직접 생활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li> <li>②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치원 의무 교육화 확립</li> <li>③우리아이 교육센터를 통한 공공 보육시설 확대</li> <li>④손주 돌보는 어르신께 보육 보조 수당 지급으로 노인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안전한 보육 시스템 확립</li> <li>⑤서울시 산하 공공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틈새없는 보육지원으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10대 공약)</li> <li>(① 만3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li> <li>② 모든 필수예방접종은 무상으로 지원</li> <li>③ 국공립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등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li> <li>④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3개로 확대하여, 내 집 앞 국공립 어린이집을 실현</li> <li>⑤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li> </ul>

			<p>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주변 지역민도 활용 가능한 보육시설로 이용</p> <p>⑥아파트, 공동주거단지 등에 유아텔(교육, 의료, 보육 등 복합적지원 기능) 100개 설립) (10대 공약)</p>	<p>이집을 설치할 시 서울시가 50%의 부담금을 지원</p> <p>⑥ 일 하는 엄마를 위한 보육 시간 연장 등 직장인 맞춤형 보육을 확대</p> <p>⑦ 가족 내 돌봄 담당자에게 '한달 하루 휴가 서비스'를 제공</p> <p>⑧ 장애영유아 맞춤형 보육을 위한 특수교사 및 치료사 확대, 통합보육을 실시</p>
3. 일자리	<p>-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지원 (①여성 전문가 시정참여 확대 ②주부일자리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 인력 개발) (10대 공약)</p> <p>- 여성, 고령자, 청장년 구직 계층별로 상담사 전담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전체공약)</p>		<p>- 청년 여성 중심의 사회적 기업 4,000개 (10대)</p>	
4. 복지/건강	<p>- 민선4기 여행프로젝트 지속 추진 (10대 공약) (① 여성친화시설 (여행 화장실, 여행주차장 등)의 민간 참여 확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② 브런치 콘서트, 천원의 행복 등 여성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③ 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밤길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p> <p>-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10대공약) (성매매,가정폭력,한부모가족, 미혼모,</p>			

	결혼이주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 임산부를 위한 완만한 근교산 자락길 조성 (전체)			
5. 폭력		- 가로등 밝기상향과 제한적으로 CCTV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CCTV 실시간 모니터 링과 통합관계시스템 (SMART시스템 활용) 구축 (10) - '서울시 아동·여성 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10)		
6. 대표성				
7. 양성평등 (성인지)				
8. 기타				

## 2) 인천, 경기, 강원 지역

분야별	인천	경기	강원
1. 가족정책	-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민주, 10대)		-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임,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200만원 지급 (민주, 전체)
2. 일과 가정의	- 4~6살 유아 80%까지 보육 시설 이용을 확대해 보육의	- 보육 시설 확대, 거점 보육 시설 운영, 지자체 단위로 보	- 강원도 공공보육 시설 전면 확대 (민노, 10대)



<p>조화</p>	<p>사회화를 실현하고, 현재 읍면동 평균 0.5개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 (진보,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베이비시터를 도입,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마다 3개씩 만들기, 직장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시간연장·휴일보육·방과후보육을 실시, 동사무소마다 보육공무원을 배치해 손쉽게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진보, 전체)</li> <li>- 24시간 365일 인친형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을 신설·확충 (민주, 10대)</li> <li>- 국공립보육시설 200개 설치 (한, 10대)</li> </ul>	<p>육 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 (국민참여,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보육 위주의 공보육에서 부모의 근로형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보육을 공보육 영역에 도입, 가정보육교사제도 확대 운영 (한, 전체)</li> <li>-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파파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 (한, 전체)</li> <li>- 공공보육 30% 달성 (진보,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주, 전체)</li> </ul>
<p>3. 일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위해 더 좋고, 더 많은 복지일자리를 만들, ‘고용안정기업우대제’ 시행으로 여성고용평등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함,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를 위한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직장보육시설과 연계 (진보, 전체)</li> <li>- 집에서 쉬고 있지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급 여성인력자원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 참신한 창업아이템과 열정을 가진 20~40대 여성창업자 300명을 선발 하여 CEO로 양성 (민주, 10대)</li> <li>-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4개소 운영, 구직여성 취업 지원 (한, 10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 노인복지, 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공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 여성 일자리 확대, 소점포를 운하는 여성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 여성의 직업영역을 넓힙니다. (진보, 10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콜센터를 유치하여 도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에 최적사업으로 만들 (한, 10)</li> <li>- 대기업/중견기업 콜센터 유치로 주부 일자리를 창출, 이주여성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보 (민주, 전체)</li> </ul>
<p>4. 복지/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노인에게 꼭 필요한 물리치료는 보건소에서 책임,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안생리대 문화를 확산,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마련 (진보,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민노, 10대)</li> </ul>
<p>5.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안전한 택시 기준을 정하고 도가 시민안전택시(회사/개인) 지정하여 귀가길 안전을 높임.(진보, 10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안전조례를 제정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실천 (민주, 전체)</li> </ul>

		-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 보장 (진보, 10대)	
6. 대표성			
7. 양성평등 (성인지)	- 여성의 고용·안전·건강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을 다함 (진보, 전체)		
8. 기타	- 여성경찰·소방관으로 여성안전대책반을 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여성안전위원회를 만들 (진보, 전체)	- 십대 여성들의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 설립하고 가출 십대 청소년 전용 쉼터 설립 (진보, 전체)	- 도내 빈곤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생활기반 조성 (한, 전체)

### 3) 충청권

분야별	대전	충남	충북
1. 가족정책			
2. 일과 가정의 조화	- 내집앞 국공립 어린이집 (4~6살 유아 80%까지 보육시설 확대로 보육의 사회화 실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을 40%까지 확대하여 질 높은 무상공공보육 제공, 동마다 3개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진보신당, 10대)		
3. 일자리	-여성이 행복한 2014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시스템 강화 (자		-도내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민주, 10대) - 더 좋은, 더 많은 지역 여성 복지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기업

	<p>유선진, 전체)</p> <p>- 여성 :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학교 도서관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한, 10대)</p>		<p>우대제' 시행, 여성고용평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섬,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를 위한 희망센터 설치, 공공직장보육시설과 연계. (진보신당, 전체)</p> <p>-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여성 취창업 지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한, 전체)</p>
4. 복지/건강			<p>-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설치 (진보신당, 10대)</p>
5. 폭력		<p>- 여성폭력 사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범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 (한, 전체)</p>	
6. 대표성			<p>-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발전센터장 개방직 현실화(민주, 전체)</p>
7. 양성평등 (성인지)			<p>- 여성의 고용·돌봄·생활을 중심으로 한 성평등조례 제정, 지자체 내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늘려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진보신당, 전체)</p>
8. 기타		<p>-여성이 돌아와 살고 싶은 농촌 건설, 여성에게 적합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농촌 활성화 (자유선진, 10대)</p>	<p>- 여성경찰 소방관 확충으로 여성안전센터 설치 (진보신당, 전체)</p>

#### 4) 호남권

분야별	광주	전남	전북
1. 가족정책		<p>- 출산 장려금 확대, 정부의 출산장려책 강화 시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지원책 강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남운동본부 등을 활용,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민주, 10)</p>	
2. 일과	<p>- 국공립보육시설 동마다 3개씩 확대, 직장</p>	<p>- 국·공립 보육시설 57개</p>	<p>- 장애인을 위한 주야간</p>

가정의 조화	<p>보육시설을 확대 (진보, 10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보육제도화 (국민참여, 전체)</li> <li>- 광주광역시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30%까지 확대, 민간보육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보육비 부담 완화 (민노, 10대)</li> </ul>	<p>소 추가 설치 (민주,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실시와 가정보육시설 지정 확대로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을 돕고 출산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처 (한, 전체)</li> </ul>	<p>돌봄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닌 일하는 여성들이 맘놓고 일하게 함 (민주, 10대)</p>
3.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새로일하기 본부와 센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연계가 되도록 구인 기업과 철저한 사전협력을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확대와 여성창업,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지원,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 (국민참여,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교육을 돕는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을 실시. (민주, 10대)</li> </ul>
4. 복지/건강			
5.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피해여성 복지 향상(국민참여,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여성 인권조례 제정 “여성·아동 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민노, 전체)</li> </ul>
6. 대표성			
7. 양성평등(성인지)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인권조례 제정, 여성인권 10개년 계획 수립, 여성인권선언문 발표, 지방정부, 사법부, 젠더전문가, 반여성폭력 관련기관, 기업들과 다자간 협약 체결 (국민 참여, 전체)</li> <li>- (가칭)광주여성재단 창설, 광주여성통합지원센터 개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광주시 조례 제·개정 (민주, 10)</li> </ul>		

5) 영남권 광역시

분야별	부산	대구	울산
1. 가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과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시책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기금 1천억원 조성 (한,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 확대, 둘째아기 이상 가구 양육비 지급제 도입 (한,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5세 미만, 소득 하위 80% 가정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민노, 10대)</li> <li>- 만3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진보, 10)</li> </ul>
2. 일과 가정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부담 완화와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우수한 보육여건 마련 (한, 10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보육 어린이집 대폭 확대, 아이돌보미 대폭 확대(맞벌이가정 아동 양육부담 경감) (한, 전체)</li> <li>- 2020년까지 대구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의 30% 수준으로 확충, 대구시 보육시설 관리위원회 설치, 대구지역 보육시설 인증제도 실시 (민주,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2배 증설 (민노, 10대)</li> <li>- 국공립 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1개씩 (진보, 10대)</li> <li>- 밤 9시까지 책임지는 '종일 돌봄교실'을 확충, 시에서 보내주는 아기 돌봄 공공베이비 시터 제도 도입, 동사무소마다 보육공무원을 배치해 손쉽게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진보, 전체)</li> </ul>
3.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활동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1촌기업 약정체결을 추진(한, 전체)</li> <li>-사회복지서비스·관광·사회적기업 분야 등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여성 적합 직종을 발굴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한,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제도화, 공공기관에서의 관행적 인력배치 행태 파괴 (민주, 전체)</li> <li>- 여성친화도시 조성 (탄력근무제·장기근속 유도), 여성 일자리 확대 (한, 전체)</li> <li>- 여성,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여성을 위한 희망센터 설치 (진보신당, 10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 여성일자리찾기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인센터 브제공(민노, 10)</li> <li>-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때 기업의 고용평등평가 반영(민노, 전체)</li> <li>- 지자체와 조달계약을 맺는 민간 기업에게 계약 체결 시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여성 고용현황'과 '고용평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매년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amp; 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실한 기업의 경우 조달계약 해지, 향후 몇 년간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줌.(진보, 전체)</li> </ul>
4. 복지/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충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 전체)</li> <li>-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다문화가정의 복지 증진과 정착을 적극 지원 (한,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 여성 및 장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인권, 복지 정책 적극 실행, 아동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및 여성가구에 대한 주거권 확보 (민주,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산후조리원 운영(민노, 10)</li> <li>- 갱년기여성 교육 및 우울증 치료지원(민노, 전체)</li> <li>- 공공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마련, (진보, 10대)</li> </ul>
5.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민주, 전체)</li> </ul>	

	CCTV설치를 확대(한, 전체) - 여성긴급 전화,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 성·가정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 강화 & 일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시행 (한, 전체)		
6. 대표성		- 여성간부공무원 비율 증대 (한, 10대)	
7. 양성평등 (성인지)	- 성인지 예산 편성,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원인적 요소를 발굴, 여성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규명하여 성숙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한, 전체) - 남녀고용평등주간, 여성주간 등 각종 계기성 행사와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발전네트워크 조성, 여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성 평등문화를 확산(한, 전체)		
8. 기타		-대구지역 다문화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구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민주, 전체)	

## 6) 영남권 도 단위 및 제주

분야별	경북	경남	제주
1. 가족정책			
2. 일과 가정의 조화	- 보육 시설 확대, 거점 보육시설 운영, 지자체 단위로 보육 지원 종합 프로그램 운영 (국민참	- 여성·보육 지원시스템 구축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한, 10대)	- 0~5세 아동 전체에 대한 보육비 지원, 제주형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보육시설 질적 향상 및 보육교사 처우

	여, 10) - 시, 군별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아동 수당제 도입 (민주노동당, 10대)		개선 (민주, 10대)
3. 일자리	- 조달 참여 기업의 여성고용 목표 평가제 실시. 여성 일자리 찾아주기 (민주노동당, 10대)		
4. 복지/건강			
5. 폭력			
6. 대표성		- 여성권익재단 설립, 여성정책 모니터링제 도입 (한, 10대)	- 여성부지사 직제 설치 및 여성 행정부서의 통합일원화 (민주, 전체)
7. 양성평등 (성인지)			
8. 기타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기반 조성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 가족 지원기금 60억 조성, 해피우먼 프로그램) (한, 10대)  - 여성, 장애인 친화지수 공공발주 PQ 제도 도입 (민주, 10대)		

## 7) 제주도지사의 여성관련 공약 분석

도지사 후보는 3명으로 여성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2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련 공약은 주로 복지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도의원의 경우 성인지정책으로 구체화시켜 여성공약을 제시하였다.

우선 우근민후보의 경우 해녀 양성과 해녀문화의 세계화, 희망이 가득한 다문화 가정, 출산율 2.0제주 플랜 성취, 여성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

등을 주요 여성정책의제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 해녀 양성과 해녀문화의 세계화 : 해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 권역별 해녀학교 개설 지원, ‘해녀후계자’ 제도 도입 및 다양한 지원 혜택 부여  
한수풀 해녀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 해녀 소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금채기 수산직불제 도입, 해녀의 생활안정, 가칭 “제주해녀 특별연금제도 도입”  
해녀체험마을 운영 지원 / ‘해녀볼텍’의 수산물 판매장 활용
- 해녀문화의 세계화  
; “물질하는 노래” 보유 해녀를 무형 지정문화재 지정, 해녀축제의 활성화  
제주해녀의 유네스코무형유산 등재 추진
- 희망이 가득한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다문화 가정센터·푸드코트 개설 및 운영 지원  
다문화 가정방문 상담지도사 확대
- 다문화 예비학교 개설 및 운영  
; 중간 입학 자녀 및 학교 이탈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기관 통역서비스 요원 배치
- 출산율 2.0제주 플랜 성취 / 출산율 1.38→2.0명  
; 0~5세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지원(사립유치원 포함),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예방 접종 무상 시행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사립유치원 교사 포함)  
; 시간외 근무수당 신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인상,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신설  
위탁형 직장보육시설 지원, 유아교육지원조례 제정
- 여성행복 제주플랜 4개년 프로젝트 / 여성이 행복한 제주  
; 여성정책연구 기능의 체계화, 양성평등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여성의 취업·창업지원 정책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여성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금융특례 지원, 경영안전 지원자금의 이자보전 확대  
김만덕기념관 건립 지원
- 도민의견 정책 반영과 확인제도 시행6  
뉴제주인, 다문화가정, 새터민을 위한 생활민원 담당배치

다음으로 현명관후보는 크게 어린이와의 약속, 여성과의 약속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경우 안전놀이터, 여성의 경우 주차공간과 핑크택시를 여성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어린이와의 아름다운 약속

① 안전놀이터 조성

-> 차량보유대수가 급증하면서 공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주택가 소규모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홀로 놀이터로 보낼 수 있도록 놀이터를 안전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필요함.

**개선방향**

->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CCTV 설치,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도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기구 설치

여성과의 아름다운 약속

① 여성주차공간배려

-> 서울시에는 2009년 4월부터 30면 이상 노상 주차장의 10% 이상, 그리고 노외/부설 주차장의 20% 이상을 여성전용주차공간으로 설정하도록 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차량보유대수가 전국 최고이지만 주차수용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상 도 조례로 강제하기보다는 남성 운전자의 자발적인 양보가 필요함

**개선방향**

-> 제주도의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10%이상을 여성배려 주차공간으로 설정

② 여성 안전귀가 콜택시

->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여겨지지만 제주도에서도 한밤중 여성 홀로 택시로 귀가하는 건 100%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잠재적인 범죄대상이라는 억울한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고초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 여성기사가 운전하고 여성 승객만이 탑승할 수 있는 ‘핑크레이디’ 택시이나 지역 여건상 영상녹화장치를 구비하고 택시 차량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는 ‘콜택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여성 승객 탑승 우선권 부여

③ 유아 건강/안전 대책

-> 모유 유축기 구매 비용 보조

-> 유아용 시트 구매비용 보조

반면 여성 후보 2인과 함께 야권단일화를 이루어 낸 고희범후보의 경우 여성관련 의제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3명의 후보가 제시한 여성공약에 있어 실질적으로 성 주류화 제도를 제시한 후보는 우근민후보로 ‘성 인 지예산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V-3> 제5회 도지사 후보 공약 분석

구 분	고희범후보	현명관후보	우근민후보
자치기능강화	○	○	○
지역경제발전	○	○	○
농업	○	○	○
인재육성	X	○	○
일자리창출	○	○	○
문화	○	○	○
복지	○	○	○
교육	○	○	○
환경	○	○	○
관광	○	X	○
산업	○	○	○

<표 V-4> 여성관련 도지사 후보 공약 단어 분석

	고희범후보	현명관후보	우근민후보
여성	x	1	1
아동	7	1	3
보육	x	4	2
청소년	x	x	x
다문화	x	1	x
성주류화	x	x	x
양성평등	x	x	x
핵심	결식아동,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 저출산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보육 성 인지예산, 여성정책기구강화

도지사후보와 도의원후보의 공약은 크게 보육, 성 주류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각 후보별로 1~2개 정도의 공약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에 집중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선거 공

약을 SMART분석으로 살펴보면 평균이 2.45점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의 마련이며, 재원 마련과 함께 추진체계 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 VI. 민선 4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관련 공약

### 1.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 내용

<표 VI-1> 민선 4기 매니페스토 10대 우선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공약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서울	-시민참여, 투명시정(여성공무원, 위원회 여성참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공공성 확대 -비강남지역 CCTV 설치	-여성/보육서비스 :1동 1공공보육시설 확보	-방과후 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시설 설치	-구립어린이집 465개 신설, 아동 2명 중 1명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인천	-노인 및 여성, 장애우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홈케어(찾아가는 가정 상담사)제 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탁아시설 확대 설치	-무상학교급식 실현
전북	-장수수당 지급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50%지원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및 지원(여성 정무부지사 임명)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부르미 택시제도 운영
광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여성인력 활성화: 시정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아동 종사자 질적수준 향상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생활프로그램, 저출산 관련 지원대책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5%상향 확대, 저상버스 콜택시 확대
전남	-	-노인·고령화 대책;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도우미 제도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영아) 보육 센터 설립</li> <li>-방과후 아동보호 센터설립(면단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여 복지분야 공공일 자리 창출:노인, 결혼한 이주여성, 장애인, 조손가정, 농가, 산모·신생아 분야 전담인력 배치</li> <li>-공공보육시설을 농촌부터 확충</li> <li>-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공공부문부터 철폐</li> </ul>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버축전 개최</li> <li>-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만두레 도입(저소득결식아동 급식 해소, 정보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 취업시장을 대폭 확대</li> <li>-여성 장애인 출산, 보육,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li> <li>-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li> <li>-결혼이민자 정착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급식예산 배정</li> <li>-공공보육시설 세배로 증설</li> <li>-보건소와 연계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저소득층 여성, 독신모, 여성가장, 여성장애인 등 대상</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lver-topia 건설</li> <li>-여성 교육 지원: 저소득층 여성 정보화 교육을 지원</li> <li>-출산지원:보육지원금 신설과 보육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동별 공공보육시설 설치</li> </ul>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합한 각 정당 10대 기본정책 중 여성정책의 내용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열린우리당

사회/복지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비를 기본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 한부모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가족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여성이 가사·육아를 전담하는 성분업적 가치관을 개선하여 양성평등적이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확충과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의 여성고용촉진정책을 실시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등에게 제공되는 무상보육 대상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급여 지원 확대와 남성육아휴직 권장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노인의 경제·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공적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까지 장기용시설 수요의 7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요양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장

## 2) 한나라당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기본정책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공약 하에 다음과 같은 공약이 제시 되었다.

- 현재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따라서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추진해야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마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 부모들이 직접 보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
- 한편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육아휴직제도와 직장복귀프로그램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도입 시급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 환경 개선 절실
- 누구나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긴급한 가정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아동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형 일시보육사업 추진, 농어촌 지역에는 순회교사, 이동 보육서비스, 계절(농번기) 보육사업 등 다양한 육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 추진

### 3) 민주당

민주당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풍요로운 미래사회 건설이라는 기본 정책 하에 아래와 같은 공약을 제시하였다.

- 다양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가치 재정립에 힘쓰며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관 형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도록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적극 육성하여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여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를 확대하는 여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성차별이 없이 여성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성 공동사회 건설.

### 4)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보육 시설대비 50% 아동대비 70% 까지 확충’,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는 일은 돈벌이가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약도 제시되고 있다.

-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 까지,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 2.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공약 내용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우선공약으로 제출한 공약 중, 취합 가능한 서울, 인천,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으로, 각 후보가 발표한 여성공약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각 후보 공약에 표시된 번호는 우선공약 10개 중 해당순위의 번호이다.

### (1) 서울

#### (가) 강금실 열린우리당

##### ■공약 1. “시민참여, 투명시정” 구현

###### ◎ 필요성

- 서울시 약 50여개의 위원회 운영, 1,300여명의 자문위원 활동 중, 그러나 공무원들이 위원장 독점, 평균 6개월에 한번 회의 개최 => 기능 상실
-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에 여성을 비롯 사회적 소수와 시민단체 참여 쿼터제 시행, 시민 공모제 도입

###### ◎ 방법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총 정원의 20% 확대 위해 승진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적극 검토·시행

###### ◎일정 및 평가계획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총 정원의 20% 확대

##### ■공약 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공공성 확대



◎필요성과 및 방법

- 비강남권 1개동에 2개소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68개동에 어린이집 설치 - 68개소

※ 부지 매입 등이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협의하여 추가지원·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등 서민, 중산층 밀집지역 - 300개소

※ 동별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다가구주택 매입이나 상가 내 공간 확보 등의 방법으로 추가 확충

■ 공약 9. 안심하고 살고 싶은 서울만들기 - 비강남지역 CCTV 설치 및 녹색놀이터 조성

◎필요성 및 방법

[비강남지역 CCTV설치]

- 최근 검거된 마포·서대문 일대 연쇄성폭력범의 경우 혼자 사는 여성, 낮에 집에 있는 전업주부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름

◎기대 효과

- CCTV설치를 통하여 혼자 사는 여성, 낮에 집에 있는 주부, 등하교길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여성, 주부, 아이들만이 아닌 청소년, 성인들의 안전까지도 보호될 수 있어 사회전반적인 범죄발생율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나) 오세훈 한나라당

■ 공약 8. 여성/보육서비스 - 1동 1공공보육시설 확보

“집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저렴하게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 방 법 : 공공보육의 확대 :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

- 공공기관의 잔여공간의 보육시설 설치 (학교, 동사무소, 도서관 등)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 기 한 : 임기내 1동 1공공보육시설설치

(다) 박주선 민주당

■ 공약 6.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고, 영어체험관을 설립하겠습니다.

◎ 추진방법

- 방과후 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시설 설치

(라) 김종철 민주노동당

■공약 5. 4년 동안 구립어린이집 465개 신설, 아동 2명 중 1명은 구립어린이집으로!

(2) 인천

(가) 안상수 한나라당

■공약 5.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추진목표

○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직접 찾아가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홈케어(찾아가는 가정 상담사)제 실시

○ 2010년까지 읍면동별 4인(560명)의 홈케어(찾아가는 가정 상담사) 배치

■공약 10. 미취학 아동의 학습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무거운 보육비로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읍·면·동별 1개

소씩 확충하겠습니다.

◎추진 목표

○ 2010년까지 현재 53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읍·면·동별 1개 (140개소)로 확충

(나) 신경철 민주당

■ 공약 4. 공공탁아시설 확대 설치

(다) 김성진 민노당

■ 공약 8. 무상학교급식 실현

- ◎목표
- (1)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현
  - (2) 시장임기(4년)내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 실현
  - (3) 중학교 차상위 일시생계곤란가정 무상급식 실현
  - (4) 지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하여 우리농산물을 사용

(라) 최기선 열린우리당

■ 공약 6. 여성의 활동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 및 여성, 장애우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전 북

(가) 염경석 민주노동당

■ 공약 10. 노인과 장애인이 편하면 정상인은 더욱편합니다. 저상버스 도입, 부르미택시제도 운영, 민주노동당이 해내겠습니다.

(나) 정균환 민주당

■ 공약 7.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및 지원(여성 정무부지사 임명)

◎ 구상

- 정무부지사 여성임명
- 도내 소재대학 연계, 사업주체는 도의회 주관
- 멘토링 위주의 사업진행
- 초등, 중등 차세대 여성리더들과 연계적 네트워크 구축
- 직업별 지도자 육성 및 발굴

(4) 광주

(가) 조영택 열린우리당

■ 공약 5.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나) 한영 한나라당

■ 공약 3. 여성인력 활성화;

- 여성능력의 재교육 및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인적자원 능력개발과 시정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 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 방안
  - 다양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아동 종사자 질적수준 향상
  - 건강한 가정육성
- 제가복지서비스 지원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생활프로그램, 저출산 관련 지원대책강화

(다) 박광태 민주당

(라) 오병윤 민주노동당

■ 공약 3. 임기내에 91개 행정동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공약 8.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5%상향 확대, 저상버스 콜택시 확대

(5) 전 남

(가) 박재순 한나라당

■ 공약 2. 노인·고령화 대책 (응급호출 발신기 지급)

◎ 목표

-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급호출서비스 제도확립
- 도시지역주거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근심걱정 해소
- 혼자 사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인등 응급발생시 즉각 구호추진
- 성폭력 등 강력범죄 위험에 노출시 긴급호출 서비스 향상

■ 공약 4. 신생아(영아) 보육센터 설립

◎ 목표

- 신생아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 정책 발굴 보급
- 야간 보육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확대
- 농·어촌 신생아(영아) 보육 센터 점진적 확대(6개소)
- 3자녀이상 가정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공약 8. 방과후 아동보호센터 설립(면단위)

(나) 박웅두 민주노동당

■ 공약 5.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있게 공급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방법

\*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학교급식조례의 규칙이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

■ 공 약 6. 흩어져 있는 각종 도우미 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분야 공공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이유

\* 이주여성, 장애인, 저소득, 노인 등 차별받고 소외 받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 방법

\* 노인, 결혼한 이주여성, 장애인, 조손가정, 농가, 산모·신생아 분야 전담인력배치

■공 약 8. 1읍면동 공공보육시설을 농촌부터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전담을 만들겠습니다

◎ 방법 \* 보육시설, 인력 현황 실사

\* 보육조례제정

\* 민간시설 지정 또는 건립

■공 약 10.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공공부문부터 없애고 소통이 보장되는 도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목표

\* 도청 공무원5급이상 여성공무원 10% 채용목표와 각종 위원회30%현실화

\* 장애인 의무고용 5% 상향조정

◎ 방법

\*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 우선 배정,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우선배정

\* 여성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고용시 이중가산제

(6) 대 전

(가) 박성호 한나라당

복지 부문

■ 공약 7. 여성의 취업시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시스템 마련
- \* 응급 도우미 파견사업
- \* 개방형 육아지원센터 설립 운영(주민 자치센터 활용)

■ 공약 8. 장애인 여성의 출산, 육아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습니다.

- \* 여성 장애인 출산, 보육,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

■ 공약 9.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유치원 아동활동 지원조례’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 \* 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
- \* 교육마우처(보육이용권) 제도 도입

■ 공약 14. 결혼이민자가 대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 결혼이민자 부부교육 프로그램(언어, 문화, 지역 정보 등)
- \* 다문화가족(혼혈아) 교육 및 취업지원
- \*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기초교육 강화시스템 운영

(나) 박춘호 민주노동당

■ 공약 2. 학교급식예산을 반드시 배정하겠습니다.

- 무상급식, 친환경 우리농산물, 직영급식 확대

■ 공약 7. 공공보육시설을 세 배로 증설하겠습니다.

- 사립 보육시설을 공공법인화 유도
- 공공보육시설 환경개선

■ 공약 11.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습니다.

- 산후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

◎ 실현경로

- 대상 : 산후 신생아와 산모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여성(저소득층 여성, 독신모, 여성가장, 여성장애인 등)

- 방식 :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사업단’을 운영, 산모의 여건에 따라 시설과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7) 충남

(가) 이완구            한나라당

■ 공약 5. silver-topia 건설

- ◎ 방법 :
  - 주거, 문화, 복지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
  - 도심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망 구성.
  - 특구 지정, 장기사업으로 2,000 세대이상 대형단지 개발.
  - 고령화 연구소, 장수연구소 및 평생교육기관 등 관련 시설 유치, 실버산업 클러스트화

■ 공약 6. 여성 교육 및 출산 지원

- ◎ 약속 : 저소득층 여성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보육지원금 신설과 보육 시설 확충으로 남녀 동등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 ◎ 방법 :
  - 컴퓨터, 외국어 전문강사를 채용(100명정도)
  - 외부수강이 어려운 지역의 여성들이 3명이상 단위 신청시 정기순회 방문교육을 추진.
  - 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가정 6세이하 유아, 보육지원금 지급.
  - 생활현장 주변, 간이 위탁·보육시설 설치운영.(점차 확대)



■ 공약 8. 능력있는 장애인

◎ 약속 : 재활지원과 특기개발 교육을 통해 장애인도 사회·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나) 이용길 민주노동당

■공약. 5 읍면동별 공공보육시설 설치

3.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권역별 여성공약 정리

위에서 살펴본 후보의 매니페스토 10대 우선공약과 별개로, 각 후보의 여성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후보별로 10대 우선공약으로 여성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은 후보의 경우에도, 여성공약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들을 제시한 후보들이 있었다. 따라서 각 후보별 여성공약을 제안한 내용들을 권역별로 정리해보았다.

1) 수도권

분야별	서울	경기도	인천
1.가족 정책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한)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 강화(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강화(한) -미혼모 시설을 확대(민) -저출산 원인의 주요 주범 사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음. (민)  (이상5개)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에게 출산장려비 100만원을 드림(열) -한 부모 가구,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수준까지 실시 (열)  (이상2개)	
2.일과 가정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보(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탁아 시설을 겸비한 주부 직능교육시설 설치(열)

<p>조화</p>	<p>-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열)  -긴급 일시보육시설 설치(열)  -야간 보육시설 확충(열)  -시간제 보육 활성화(열)  -522개동 지역거점 육아지원센터 지정(열)  -출산비용 및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열)  -0-2세 영아 보육시설 확충(열)  -3-5세 보육시설 확충 및 개선(열)  -6-10세 방과 후 학교 설치(열)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열)  -보육정보통합전산망 구축(열)  -친환경 급식 제공(열)  -안심보육센터 설립(한)  -선진형 보육시스템 도입(한)  -공인베이비시터제 도입(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한)  -1개동 1개 공공보육시설 건립(한)  -공공기관 및 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의 확충(한)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한)  -민간의 적극적인 기부 유도(한)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시스템 구축(한)보육을 공개념으로 전환, “우리 동네 아이, 우리가 돌보기 개념”의 돌봄 공동체 보육 프로그램 운영(민)   -공공보육시설, 24시간 운영 확대(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출산, 보육친화적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민)  -동대문, 구로, 성수지역 등에</p>	<p>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제2의 가족' 만들기 운동 (열)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시설 보급율을 2005년 34.8% 수준에서 2010년까지 70%까지 올리겠음.(열)  -품앗이 은행을 통한 지역사회 단위 주부들이 가정집을 보육 보조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여 이웃아이 공동보육 서비스를 제공(열)  -만 0~1 세의 영아 보육을 1:1 전담하는 “Care Mom(영아돌보미)” 도입(한)  - 맞벌이 부부의 소득 정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  -예방접종, 응급상황 대처, 애착발달 등 영아교육의 최고 전문가 Care Mom 육성(한)  -저녁 시간대의 보육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강화(한)  - 공공보육시설 확대로 돌봄 공동체 보육제도 운영(민)  (이상 8개)</p>	<p>-공공 탁아시설 확대 설치(민)  (이상 2개)</p>
-----------	--	--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종합플랜]을 실시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것음.(민노) (이상 25개)		
3. 일자리	-지역사회지원형 여성 일자리 창출(한) -종합 원스톱 취업센터 설립(한) -여성취업박람회 정례 개최(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인증제를 도입(민)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소규모 여성 자영업자(민노) (이상 5개)	-품앗이 बैं크를 통해 노인과 주부들이 지역공동체 단위 유료 품앗이 도우미(열)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겠음.(열) -여성 및 중장년층 일자리 30만개창출(열)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근로자복지센터 등의 기능을 대폭 개편(열) -경기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프로그램 가동(열) - 품앗이 인력 Pool제를 극대화하여 여성들의 육아보육 부담을 줄임(열)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적합한 고급 여성인력 육성을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실시(민) -여성일자리 창출 Project 추진(민) -공공보육시설을 2배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실시(민노) (이상 10개)	
4. 복지/건강	-임산부 등 건강약자 뱃지 지급(열) -지역보건소 1:1 사례관리(열) -<긴급구호시스템-핫라인> 확보(한) -여성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발(한) -임신에서 출산까지 "hospital care"제도 도입(민) -노동-복지를 연계하는 지역 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 여성 50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 모유수유 공간을 설치하도록 지원(열) - 임신에서 출산까지 "Hospital Care"제도 도입(민) -"산모돌보미"로 전업주부, 건강 여성노인인력 교육하여 저소득층에 제공(민) (이상 3개)	

	체계(민노) (이상 6개)		
5. 폭력	-위험시 안심천사 콜 버튼 (Safety Call)-위성(GPS)위치 추적시스템을 이용, 경찰서 최단시간 안에 출동 가능한 시스템 구축.(열) -성폭력 보호대상자 정보이용료(이용자 부담 최소화)와 안심천사 콜 버튼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열) -긴급한 의료조치와 법률지원(열) -의료, 법률, 상담, 센터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열)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예산편성 및 정책참여제도 "여성폭력방지협의체" 마련(열) (이상 5개)		-안심전화 시스템으로 여성들의 안전 귀가 도모(열) (이상 1개)
6. 대표성	-서울시 공무원 직급별 성비 유지(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비율 확대(한) (이상 2개)		
7. 양성평등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성인지)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민) (이상 1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성인지 교육(열) (이상 1개)
8. 기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시스템 도입(한)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한) (이상 2개)		

2) 충청·강원

분야별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가족 정책				-여성가장희망센터 설치, 이주여성지원체계 구축(민노) (이상1개)
2.일과 가정의 조화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가정 6세이

			(열) (이상 1개)	하 유아, 보육지원 금 지급(한) -생활현장 주변, 간이 위탁·보육시설 설치운영.(한) -공공보육시설 확 대, 주간보호시설 확대(민노) -'방과 후 아동 청 소년활동조례' 제 정(민노) (이상4개)
3.일자리			-여성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노력 (열) (이상 1개)	-공공부문 여성 일 자리 창출, 구직 지원(민노) -비정규 여성노동 자 권리 찾기 지원 (민노) -여성 농업인센터 확대, 농가도우미 지원(민노) (이상 3개)
4.복지/건강				-공공산후조리지원 설치, 산후조리도 우미 파견(민노) -공공시설 놀이방 여성휴게실 설치, 교통체계 개선 (민 노) (이상2개)
5.폭력				-아동 여성폭력없 는 안전한 지역사 회(민노) (이상1개)
6.대표성		여성의 가치와 권 익, 참여가 최대로 보장되는 「여성정 책 모범도」를 만 들겠음(한) (이상 1개)		
7.양성평등(성인지)				
8.기타				-여성정보화 교육 을 위해 컴퓨터,

				외국어 전문강사를 채용 및 순회 방문 (한) (이상 1개)
--	--	--	--	---

### 3) 호남지역

분야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1.가족 정책	-한 부모 가정시설보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 정생활 프로그램, 저출 산 관련 지원대책 강화 (한) (이상 2개)		
2.일과 가정의 조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과 보육아동 종사자 질 적수준 향상(한) -맞벌이 부부 등 야간 에 이용할 수 있는 국공 립 어린이집 확대(민노) (이상 2개)	- 공공 보육시설을 2배로, 어려운 가정에는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실시(민노) (이상1개)	-신생아(영아) 보육센터 를 설립(한) (이상 1개)
3.일자리	-여성인적자원 능력개 발(한) -여성 능력 개발과 취 업을 위한 교육, 박람회 등의 기회 제공(민) (이상 2개)		
4.복지/건강		-비싸서 못 가던 산후조리 원, 저소득층 여성에게 ‘공 공 산후조리원’을 설치(민 노) (이상 1개)	
5.폭력			
6.대표성	-시정위원회 여성참여 확대(한) (이상 1개)		
7.양성평등(성인지)			
8.기타			

### 4) 영남 지역

분야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1.가족 정책		-출산육아기금	-여성가족정책센		

		조성(열) (이상 1개)	터(한) -‘여성가장 희망 센터’ 설립 운영으로 한부모가족 돌봄(민노) (이상 2개)		
2.일과 가정의 조화	-임기 내 동네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단계적 설치(민노) -인구 1인당 보육재정을 울산 수준으로 확보(민노) -보육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10만원 지원 및 보육인력 재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민노) -민간보육시설 지원 및 엄격한 관리, 감독(민노) (이상 4개)	-공공 보육 시설 확충(민노) (이상 1개)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울산 협약’ 제정(민노)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2배로 늘림(민노) -‘방과후 아동청소년 활동조례 제정으로 홀로 방치되는 아이 없는 울산(민노) (이상 3개)	-보육시설 확대(한) (이상 1개)	
3.일자리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한)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지도자 발굴(한) (이상 2개)		-여성 취업센터 설치 운영(한) -계약준수제 실시로 여성노동자 차별 철폐(민노) -‘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 설립’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민노) (이상 3개)	-여성인력개발 센터운영(한)  (이상 1개)	-여성.노인.장애우를 위한 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설치.운영(한) (이상1개)
4.복지/건강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해서 울산시가 여성건강을 돌봄(민노) (이상 1개)		
5.폭력		-여성 범죄예방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아동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로 안전한 울산(민		

		등(민노) (이상1개)	노) (이상 1개)		
6.대표성					
7.양성평등(성인지)				-양성 평등 실현(한)	
8.기타					

5) 제주

분야별	제주도
1.가족 정책	
2.일과 가정의 조화	-야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열) -전업주부를 위한 시간제 보육 지원 실시(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열) -보육 환경의 개선(한)
3.일자리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여건 개선(한)
4.복지/건강	
5.폭력	
6.대표성	
7.양성평등(성인지)	
8.기타	-제주 해녀의 문화재 지정(한)

6) 지역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한 여성관련 공약

지역	내용
서울	-가족의 해체(원조 교제, 가정 파산 등)에 관한 대책 요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 요구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화 시대에 맞춘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육아비용 중 기저귀 비과세 등 지원 요구 -노인을 위한 공적 부조 확대 -여성 취업 문제 해결 -탁·유아시설 확충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보육 지원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필요 -호주제의 보완으로 남아선호 철폐를 위한 대책 강구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과제 해결 -어린이집, 학교 등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만들기
경기	-직장과 어린이집의 연계 요구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
충북	-농촌 여성들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 -노인 여가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가족 해체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들의 보육 시설의 확충</li> <li>-노인 전문 병원 등 Care-system 확충</li> <li>-산아장려정책과 보육제도 개선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책 강구</li> <li>-무료탁아소 설치와 어린이집 시설이용료 인하요구</li> <li>-미혼부모에 대한 대책 요구</li> </ul>
충남	-이혼, 재혼 가정의 아동복지 대책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은행운영으로 여성 고용 창출</li> <li>-사이버 성폭력 현실에 대한 대책 요구</li> </ul>

## Ⅶ. 민선 4기 및 5기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분석

### 1. 정당의 10대 우선공약과 여성정책 공약의 순위

주요 정당들은 정당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순위 공약으로 가장 많이 내건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의 1순위 공약은 맞춤형 일자리,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서민 일자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전체 공약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보육, 여성의 안전, 여성의 참여보장과 관련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1순위) 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설치확대가 들어있었고, 아이키우기 편안한 나라(2순위)에는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밖에 소외와 차별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7순위), 안전한 우리동네(8순위) 처럼 주요 세가지 공약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3순위)에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고,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실시(4순위)에 보육인프라 구축이나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자유선진당은 보육(2순위)과 여성안전(8순위)의 공약, 민노당, 참여당, 진보신당은 각각 아동수당 신설 및 보육인프라 구축을 4, 5, 6 순위에 올려놓았다.

한편,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공약도 있었는데, 4대강사업 중단이 민주당(2순위), 진보신당(9순위)에서 나타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이 민주당(6순위)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에서 통과된 SSM 허가과 관련하여, 책임행정과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으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7순위) 같은 공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공약이 많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적 기업 운영, 서민생활 및 농어촌 생활 안정 등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내용이 있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민주당의 1순위 공약으로 자리잡았고, 한나라당(5순위), 민노동(2순위), 참여당(4순위), 진보신당(3순위)에서도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어 무상급식정책에 무게를 두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I-1> 2010 지방선거 정당별 10대 공약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1.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1. 일자리를 5년간 300만개 늘림	1. 전국민에게 고용안전망 확충	1.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입찰 제한 등으로 서민들 일자리 보호
2.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2. 4대강사업 중단, 민생예산 확보	2.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 늘림	2.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 전면확대	2.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2. 사회복지제도 입
3. 서민, 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3. 어르신, 장애인 지원을 늘림	3. 우리가족에게 주치의를	3. 최저임금 월 100만원 시대	3.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내 집값이 좋은 학교	4.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 교육 실시	4. 지방재원을 늘리고 지방 자율성을 높임	4. 아동수당 도입	4. 친환경 무상급식	4. 대학 서열체제 혁파하고 국공립대 확충
5. 365일 든든한 급식	5.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비수급	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늘림	5.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20% 확보	5. 야간, 주말, 휴일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5.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면 강화, 국공립 의료 시설 확충
6. 힘내라 중소기업	6.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6. 등록금, 사고유비 내림	6. 농어업 직불제와 최저보장 가격제도 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	6. 장애인 의무고용 1% 상향으로 총 4% 의무고용 시행	6.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7.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7. 어르신 복지대폭 확대로 효과는 민주당 실현	7. 서민생활과 주거안정 보장	7. 책임행정과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지키기	7. 효도하는 건강 투자 보건소 중심으로 어르신 활력 충전소 운영	7. 일자리 확대, 실업수당 신설
8.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동네	8.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8. 범죄, 사고발생률 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	8. 공공무선 인터넷 제공	8.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 평가제도 실시	8.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단체협약 확대해 고용보호와 임금 수준 향상
9. 골고루 잘 사는 내 고향	9. 공교육 정상화	9. 붕괴 위기의 농촌을 살린다.	9. 주민이 낸 소중한 세금, 주민이 원하는 곳에	9.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9. 4대강 사업 중단, 자연스런 물길 되살림
10. 경쟁력 있는 농어촌	10.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언론에 대한 지원강화	10. 나라 빛, 국민부담 줄인다.	10. 지방재정, 복지 예산으로 되찾음	10. 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운영	10. 부분별한 재개발 중단하고 공공 임대주택 대폭 확충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홈페이지 각 정당 주요공약

## 2. 민선 4·5기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 비교 및 특징

2006 지방선거와 2010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여성정책 공약을 비교해보면, 2006년에 비해 2010년은 정책의 제안 분야와 숫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선거당시 주요 이슈에 대한 반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2006년 선거에 있어서는 행복한 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공약들이 주요 정당에서 제기되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일가족양립과 관련한 공약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공약인데, 2006년 선거에서는 보육서비스 확대,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단축, 방과후 학교라는 형태로 제안이 되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보육인프라 구축, 유무상 보육실시 등 보육정책에 대한 범위가 다소 좁혀진 상태로 제안되고 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일자리, 취업시장 확대 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2010년 공약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비정규직 고용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대표성,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주요정당이 각제한된 수준에서 공약을 제안하였으나, 2010년 정당의 공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공약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분석을 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다양하고, 여야 정당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많은 정책공약을 발표하였으나, 2010년 지방선거는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 발표되었지만 여성정책 관련공약은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Ian Budge(2001)의 주장대로 한국 정당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반영한다기 보다,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선거의 경쟁적인 압력 때문에 각 정당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6년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여성관련 주요이슈에 대해서로 유사하면서도 경쟁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였고, 2010년 선거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강조를 아예 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였다는 점,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2> 2006 지방선거 정당의 분야별 여성정책 공약 분포

분야	열린우리당 (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계
1. 가족정책	4	3	-	3	10
2. 일가족양립	10	6	2	5	23
3. 일자리	5	6	2	8	21
4. 복지/건강	1	3	-	9	13
5. 폭력	3	3	-	5	11
6. 대표성	-	2	-	3	5
7. 양성평등	-	3	1	3	7
8. 기타	1	2	-	-	3

출처: 변화순(2006). p. 16-19.

<표 VII-3> 2010 지방선거 정당의 분야별 여성정책 공약 분포

분야	한나라당 (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 신당	계
1. 가족정책	-	-	-	-	-	-	-
2. 일가족양립	2	1	2	1	1	1	8
3. 일자리	1	1	-	-	-	-	2
4. 복지/건강	-	-	-	-	-	-	-
5. 폭력	1	-	-	-	-	-	1
6. 대표성	-	-	-	-	-	-	-
7. 양성평등	-	-	-	-	-	-	-

다음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개발은 정당의 공약을 근간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후보자의 공약이 만들어진다. 정당의 공약이 아닌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을 민선4기와 민선5기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역적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후보자들의 여성정책공약의 지역적 특징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여성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다. 일단 제시된 정책의 수와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일가족양립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육정책 등이

제시된데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보육정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 분야별 정책이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비수도권지역에서는 보육정책이나 일자리 분야로 치중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공약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의 경우,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보인 지역으로 대전, 충남, 광주 등이 있었고, 여성 농·어민에 대한 관심은 전남,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나타났고, 여성 부도지사 등 공직분야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관심은 전북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지역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들이 각 지역별 여성문제의 현황과 원인 파악에 대한 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지역맞춤형 정책의 제시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표 VII-4> 민선4기(2006)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분야별 공약  
(단위: 개)

분야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계
1.가족 정책	5	2	0	0	0	0	1	2	0	0	0	1	2	0	0	0	13
2.일가족양립	25	8	2	0	0	1	4	2	1	1	4	1	3	1	0	4	57
3.일자리	5	10	0	0	0	1	3	2	0	0	2	0	3	1	1	1	29
4.복지/건강	6	3	0	0	0	0	2	0	1	0	0	0	1	0	0	0	13
5.폭력	5	0	1	0	0	0	1	0	0	0	0	1	1	0	0	0	9
6.대표성	2	0	0	0	1	0	0	1	1	0	0	0	0	0	0	0	5
7.양성평등 (성인지)	1	0	1	0	0	0	0	0	0	0	1	0	0	1	0	0	4
8.기타	2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4

<표 VII-5> 민선5기(2010)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분야별 공약  
(단위: 개)

분야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계
1.가족정책	1	1	0	0	1	0	0	0	0	1	1	1	2	0	0	0	8
2.일가족양립	3	4	3	1	2	0	0	3	1	2	1	2	3	2	1	1	29
3. 일자리	3	3	1	2	2	3	0	1	1	0	2	3	3	1	0	0	25
4.복지/건강	3	2	0	0	1	1	0	0	0	0	2	1	3	0	0	0	13
5. 폭력	2	0	2	0	1	0	1	1	1	0	2	1	0	0	0	0	11
6. 대표성	0	0	0	0	0	1	0	0	0	0	0	1	0	0	1	1	4
7. 양성평등 (성인지)	0	1	0	0	0	1	0	0	0	0	2	0	0	0	0	0	4
8. 기타	0	1	1	0	1	1	1	1	0	0	0	1	0	2	0	0	9

한편,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에 도전하는 민주당 여성후보인 한명숙 후보가 있었다. 한명숙 후보는 여성운동 1세대, 초대 여성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한국의 여성운동가이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후보 출마라는 의미 그 이상을 부여할 수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본 결과, 한명숙 후보가 예상했던 것 만큼 여성정책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았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오세훈후보는 2순위에서 세부공약 4개, 한명숙 후보는 3순위에서 세부공약 3개를 제시하고 있었다. 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오세훈 후보는 7순위, 한명숙 후보는 6순위에 제시하였으나, 오세훈 후보는 여성이나 여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반면, 한명숙 후보는 ‘어린이와 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서울시 아동·여성 안전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3. 여성단체 공약요구사항의 반영정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성이라는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방정치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지방정책의 혜택이 남녀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모토 하에 환경정책, 교통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 탁아 및 육아, 노동정책, 청소년정책 등 주민의 생활여건 조성 문제와 여성의 문제를 같은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여성계가 주력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여성 후보 발굴 및 풀 구축, 선거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여성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여성이 출마한 기초의회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후보 지지에 성별 요인보다 정당효과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했다(20.1%)는 비율보다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31.0%)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여성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역구 시도의원 당선율로만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제4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대비 당선자 비율은 여성의 경우 29.9%의 당선율을 보였고 남성은 31.8%의 당선율을 보여, 그 차이는 약 1.9%를 나타냈을 뿐이다. 여성 후보라고 해서 남성 후보들에 비해 당선율의 격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정당효과를 덧붙여 유력 정당들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 당선율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금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일차적으로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고, 남녀동수의 공천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설립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공동대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이하 ‘연대’로 지칭)는 2009년 11월 5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의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여 각계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범여성계 연대조직이다.<sup>18)</sup> 이 조직은 우선 “연대”



출범 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각 참여단체 연명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추진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여성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시켰다. 연대 출범 이후에는 “남녀동수참여”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선출직과 비례직을 포함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50% 및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 50% 여성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단체별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특히 각 정당의 여성공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대’를 중심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성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여성들의 힘을 모아 생활 정치의 장인 지방의회에서의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등 지방선거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여성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2010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공천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의 틀을 개선하여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선출직 및 비례대표 여성 할당 강행 규정화’와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시켰다. 그리고 각 당 여성공천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시켰다.

18) ‘연대’는 2004년 총선여성연대(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이후 처음 구성된 범여성연대 구성이다. 참여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49개단체, 16개협동회원단체), 대한간호협회(전국 17개지부),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전국 27개클럽), 21세기여성정치연합(전국 11개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 6개지부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10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6개지방연맹 140개지부 1개청년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전국 9개지부 77개지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전국 6개지부 45개지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이다.

## (1)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여성계는 선거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바로 공천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각 당이 여성 공천을 확대하여 여성에게 정치참여의 직접적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여성이 경쟁력과 조직력을 강화해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공직선거법상 ‘임의규정’인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권고조항<sup>19)</sup>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토록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 관행상, 여성의원 수 확대를 위한 가장 빠른 길로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9년 1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선출직 여성할당 조항에 이행강제조치가 빠져 있다는 점에 큰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12월 30일 ‘연대’는 정개위 합의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크게 두 가지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정개특위가 활동시한이 연장되는 즉시 할당제 이행강제조치를 마련할 것과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선출직 30% 여성 할당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 강제규정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꾸준히 국회 방청 및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 혹은 기초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의 권고조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었다. 이에 여성계에서 논란을 제기해 왔고,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고 여성할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월 5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반시 제재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남

19)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규정을 이행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하였다.

성 정치인들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2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각 정당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50% 참여를 보장하고, 명확한 공천심사기준의 심사결과 공개하며, 공천배심원단 선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벌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과정에서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을 이끌어냈고,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무공천의 첫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상 의무공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성계의 평가이다.

### (2) 관련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위원 참여 보장 요구

여성계는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내 중요 위원회에의 여성 참여 보장을 주장하였다. 특히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위원 중 애초에 여성위원이 전무하였고 나중에서야 두 명이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각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남성들이 참여하는 공천심사로는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 (3) 당헌 당규 수정을 통한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 구축 요구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 이하 한여유)이 지방선거를 대비한 워크숍을 열고(2010년 3월 24-25일) 3당 대표를 방문하여 양성평등 선거를 치러 주기를 당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여성계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이러한 인식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자의 경력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4월 22일에는 ‘2010 지방선거 여성

공천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 20% 여성후보 전략공천과 선출직 30% 여성공천 실행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연대'가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당 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 면담과 의견서 등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선출직 여성할당 30%를 명문화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

② 각 정당은 공천심사위원회 여성참여를 50% 참여 확대하고, 명확한 공천심사기준과 심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할 것

③ 2010 지방선거 선출직 여성참여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임. 또한 여성당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힘도 바로 소속 정당에 있음. 따라서 기초단체장 및 선출직후보의 경우 각 정당이 당선 능한 우세지역에 여성을 전략공천해야 함.

④ 기초단체장 여성공천확대는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기초단체장 20% 여성전략공천을 요구함.

⑤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 1인이상 여성공천이라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최소한의 기준임. 또한 해당 조항이 오히려 여성공천의 제한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광역선출직 여성공천이 강조되어야 해야 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상의 선출직 여성공천 강행규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초선출직 복수공천시 기호를 여성에게 <가>번을 배정해야 함.

## 2)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 노력

여성후보자 발굴과 관련해서 '연대' 참가단체가 각 단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다만 상황에 따라 단체장 등에 유력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당선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 참가단체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10년 2월 18일 좋은 여성 후보를 선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2010 지방선거 좋은 후보 책임지기' 발대식을 가졌다. 단체에 신청한 지방선거 참여 희망 여성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적합한 예비후보를 선정한 후, 전문가를 초청해 정치권에 추천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정당이 공천시 요구하는 동일한 서류들을 사전에 제출하게 해서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최종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후보자간에 자

신의 장점과 단점, 선거에 임하는 자세, 후보자의 경험과 경력 등을 토대로 선거에 필요한 전략, 메시지, 공약 등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하였다. 또한 3월 24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6개 지방연맹 대표들과 연맹에서 선정한 ‘좋은 후보’ 중 선거에 출마하는 17명을 모아 이들의 의정계획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스피치 기법을 강의하였고, 다음날인 25일에는 ‘지역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는 등, 후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당의 여성위원회와 연대하여,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노력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에 여성계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정당들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여성후보가 없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더 나아가 여성 정치인의 세력화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성계는 2003-4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진 이러한 노력들(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이 축적되어 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정당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3) 여성후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 (1) 여성공약/정책 협약

여성계에서는 예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성, 보육,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에 걸쳐 공약을 개발 및 발표하고 후보들과의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여성’ 이슈를 지방자치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공약의 내용으로는 크게 ‘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보육의 사회화’,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 강화’, ‘성 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전면화’ 등을 제시하였다.

#### (2) 여성 후보에 대한 인적 자원 지원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여성 정치인을 위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김경미)는 여성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발로 뿔 캠프 자원봉사자인 ‘여성 캠프지기’(자원봉사 활동기간 : 5월 20일~6월 1일)를 모집하였다. ‘여성 캠프지기’는 5월 14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사전교육을 받았다.

사전교육에는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출마 현황에 대한 교육부터 선거 일정과 선거법 강의, 자원봉사 실무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으로 이뤄졌으며, 자원봉사자의 정치 성향과 지역 등을 고려해 여성후보 선거 캠프에 배정받아 활동하도록 하였다.

#### 4) 지역별 여성정책 의제 및 공약 발표

##### (1) 인천여성연대

‘2010 지방선거 여성정책 후보 협약식’이 17일 인천여성연대<sup>20)</sup> 주최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여성연대가 제안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 ②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종합서비스 체계 도입
- ③ 비정규직 차별규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
- ④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돌봄 노동 사회적 시스템 마련
- ⑤ 양육의 공공성 확보, 아동보호,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
- ⑥ 성 주류화. 여성대표성. 여성정책추진 체계 강화
- ⑦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이주민 지원 단체 네트워크 구성
- ⑧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인권의식 확대
- ⑨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에 대한 복지 및 인권보호 확대
- ⑩ 여성가구에 대한 주거권 확보

##### (2) 안양여성연대

안양여성연대는 성명서<sup>21)</sup>를 통해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후보 공천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30% 여성정치할당제의 정신이 살아있도

20) <http://blog.naver.com/pp900d/30086301494>

21) <http://blog.daum.net/news33/15966561>

록 각 정당은 여성후보에게 ‘가’번을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정당별로 여성 할당제를 감안한 여성후보 발굴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여성들이 30% 할당제의 의미에 걸 맞는 의회로의 진출을 앞장서서 보장하는 공천심사 과정은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끼여 맞추기 할당을 한 것은 생색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복수공천에 나서는 각 정당별 순위배정에 있어 여성후보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의 순번을 주거나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여성 할당제의 정신에 위배되는 성차별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양 여성연대 안양지역 지방선거 출마 여성후보자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아래의 5가지 정책협약안을 발표했다<sup>22)</sup>.

- ① 성인지 예산으로 양성평등한 시정살림 운영
- ②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 ③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 ④ 여성의 의사결정 구조 및 정책참여 확대
- 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 (3)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남녀동수 실현을 위해 각 당이 공천과정에서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전략공천, 선출직 여성 할당의 자발적 실천, 공천 시 ‘가’번 기호배정 우선권 부여,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여성공천할당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2010 지방선거 여성공천확대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요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다<sup>23)</sup>.

- ① 각 당은 기초단체장 20% 여성전략공천을 이행하라
- ② 각 당은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라

22) <http://blog.daum.net/news33/15966620>

23) <http://blog.naver.com/salri9/100104321486>

## VIII. 결론 및 향후과제

### 1.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공약 특징과 한계

후보자가 제시한 가장 빈도 높은 공약을 여성정책의 분야별로 정리했을 때, 1순위는 일가족양립(보육정책), 2순위 일자리 창출, 3순위 가족정책(한부모, 저출산, 이주여성문제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가족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정당차원에서 마련한 공약은 각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며, 각 정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른 지역의 후보자이면서 유사 정당일 경우 유사한 내용의 정책기조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서울과 인천의 보육정책이 유사한 기조를 갖는 것이나, 민주노동당의 장애인 정책이 유사기조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기조와 달리 해당 지역의 단체장 후보의 공약에서 채택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농민에 대한 문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 지자체 여성주민의 시·도정 참여와 같은 대표성의 문제 등은 단체장 후보에서 간과되는 측면이 컸다.

종합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정책공약을 분석하면서 가장 큰 한계점은 분석의 틀 마련과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다. 성인지적 SELF 지표를 가지고 여성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의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각 후보의 여성정책을 완전히 수집하지 못하고 취합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대한 한계가 분명 있으며, 후보자에 따라 여성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 두줄 수준에서 시민과의 약속 수준으로 발표한데 따른 분석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이다.

두 번째는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안하도록 하자는데 있었기 때문에, 가족정책분야와 같이 정책관심도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나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문제 등 사회적 인식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계획방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아예 생략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서도 기존의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여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노인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대부분 후보들이 정당의 여성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발표한 것으로 보이나, 중앙차원에서 잘 구성되어있는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후보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한부모, 빈곤여성, 여성장애인, 미혼모, 이주여성 등에 대한 정책은 위의 두번째와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원을 약속하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거의 모든 후보자가 보육정책에 대한 중·단기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마련의 방법까지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인 수준이었다.

중앙의 여성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성인력과 일자리 등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다소 부진한 듯 하다. 또한 중앙의 여성정책 기조가 보육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지역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여성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농·어촌 여성에 맞는 정책의 제시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몇몇 지역에서 제안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성정책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정책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 일종의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담론을 활발히 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라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한편, 2006년 선거당시에 여성정책의 분야별로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단지 4년이 지난 시점인 2010년에는 가족정책이나, 복지 및 건강과 같은 정책공약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매니페스토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매니페스토를 평가하는 지표에도 있듯이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향후과제

### 1) 지방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에 여성 확대

우리나라는 여성의 정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직분야의 고위 임명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최고위직인 부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기보다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차원에서 보다 고려되어야 할 조치이다. 지자체 부자치단체장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여성부단체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로의 전환 및 남성 정치인의 의식변화 촉구

여성의 정치참여 과정에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주된 행위자가 정당이라는 현실에 주목할 때 당연한 사실이다.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3.7%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5.7%(14명)에 불과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지역구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기초 또는 광역의회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할 때, 반드시 1명 이상은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시구에 해당, 군은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만족할만 한 수준은 아니나,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가 약간 증가했다. 실제, 기초의회의 경우 2006년 여성후보가 4.9%에서 2010년 9.4%로 늘었고, 지역구 당선자도 지역구 2006년 4.4%에서 10.9%로 증가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여성후보가 2006년 5.2%에서 2010년도 8.6%로 약간 늘었고, 여성당선자도 2006년 4.7%에서 8.1%로 약간 증가했다.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앞으로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역구의 30%이상을 의무공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힘 있는 남성정치인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3)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공천 의무화 제도(시, 도 20%, 구, 시

30%, 군 20%) 도입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장직에 대한 여성참여확대는 필수 조건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여성 친화적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배출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0%, 기초자치단체장 중 시·구 단위 30%, 군 단위 2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하여 살펴볼 경우 권역별로 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②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③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④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⑥ 종로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⑦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⑧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나누어 이중 1지역은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6명의 여성후보가 있었는데, 한나라당 8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평화민주당 2명, 무소속 10명이었다. 이중 한나라당 후보 5명과 민주당 후보 1명만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의 신연희 당선자, 송파구의 박춘희 당선자, 부산 중구의 김은숙 당선자(재선), 사상구의 송숙희 당선자, 대구 중구의 윤순영 당선자(재선)이고, 인천 부평구의 홍미영 당선자이다.

#### 4)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다. 단지, 16대 총선 이후 여성의 일부를 공천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11명중 공천심사위원중 4명(36.3%), 통합민주당은 12명의 공천심사위원중 0명(0%)이었다. 따라서 정당들은 앞으로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5)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3년 연구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중 당선된 사람 중 과반수가 초선이었고, 이들의 직업은 대체적으로 정치/정당인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기회가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는 일이 다른 직업에 비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차원의 당직을 맡는다 해도 형식적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현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정당들은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6) 여성의원의 의원경력 지속성을 위한 마련 및 양성평등한 공천문화 확산

여성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초선보다는 경력자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의정활동에 있어 모범적인 활동을 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제 재선을 보장해주거나 다음 선거시 지역구에 우선 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지방의회 후보를 공천하는데 있어 경선제, 여론조사경선, 면접, 토론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 양성평등한 문화를 이를 공천방식의 마련이 요구된다. 추후, 여성의원 경력지속성을 위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7)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4월 9일 18대 총선이후 4월 19-23일까지 만 19

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하여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바람직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가 62.1%로 가장 높았다. 지금이 적당하다가 20.6%로 나타났는데, 여성 국회의원 증가 방안으로는 “능력 있는 여성정치인 육성”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명목 하에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이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 8)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후보 발굴 및 선거지원 강화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1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가 개정되어 이제 여성단체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여성조직은 우선 정치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여성단체, 여성법조인, 여성언론인, 여성경제인, 여성근로자, 여성공무원 등 여성집단과 연계하여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당직자 및 각급 공직선거의 후보로 추천한다. 정당들은 평시에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전·현직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단체장, 여성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을 구성하고, 선거시에는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산의 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연합, 여성민우회, 걸스카웃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는 여성단체들의 유권자를 대

상으로 한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아울러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분야의 강사은행을 설치하여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 이수생들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 (9)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네트 워크 강화

금번 지방선거에서 결성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여성공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일부 여성단체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을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대사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공동대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구성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향후에도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2010지방선거남녀동수범여성연대”는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대활동의 전개, 둘째, 여성후보의 발굴 운동, 셋째, 정당의 정책비교 활동, 넷째, 유권자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커다란 기반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아쉬운 것은 17대 총선시와 같이 여성후보 명단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선거지원 운동도 미약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때로는 여성단체 독자적인 측면에서 여성후보 추천 및 선거지원운동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10)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점점 선거에서 사이버 공간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단체들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유권자들 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e-카드 보내기 운동<sup>24)</sup>, e-사인운동 전개<sup>25)</sup>,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sup>26)</sup>, 주제별로 사이버 토론장을 개설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1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정부, 정당, 여성단체가 여성의 정치력 향상과 지위확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구결과와 자료의 생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정치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유권자 표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 연구, 기존 정치 풍토에 여성정치문화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방안, 여성에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게 되는 의원들의 여성의식 조사, 여성진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선거제도 관련법제 연구, 경선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여성후보자 육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통하여 여성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24) 한사람이 열 사람에게 여성후보 지지 및 여성유권자 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요청하는 식의 e-카드를 보낸 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피라미드 조직식으로 열 사람에게 e-카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25) 컴퓨터를 활용한 후보지지내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요 서버에 사인을 받는 방법

26) 정치에 관심이 있는 후배와 선배간의 사이버 멘티와 사이버 멘토로 연결해 주는 방법

## 참고문헌

- 김명숙.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공약 분석 및 이행전략”, 「민선 3기 지자체의 여성정책 공약 이행 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김복규. 2003. “선거공약을 통해서 본 여성정책과제”.
- 김상목·송근원·장경석·최승범. 2007. “대선 정책공약 평가지표 개발”, 「대선정책공약 비교분석 기획」.
- 김상준·오현순. 2009. “매니페스토 운동과 심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시민사회와 NGO』
- 김영래. 2008.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치문화의 발전 과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1집 2호.
- 김영래. 2007.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45집
- 김원홍·김은경·정현주·이현출. 2007. 공직선거의 여성정책 공약 평가틀 개발에 관한 연구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 외. 2010. 『6·2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기관과의 지역협력세미나
- 김은경. 2006. “16개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공약 평가와 매니페스토”, 「2006지방선거 여성정책공약 토론회: 여성이 바라는 여성정책공약」, 한국여성개발원.
-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6.2 지방선거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 남승하·오수길. 2008.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과 성과관리 차원,”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 박경미. 2009. “국내 서평: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매니페스토를 통한 책임정치: 정치선진화의 제도적 처방,” 『의정연구』
- 변화순. 2006. “매니페스토운동과 각당의 분야별 여성정책공약평가”, 「2006 지방선거 여성정책공약 토론회: 여성이 바라는 여성정책공약」, 한국여성개발원.
- 신제호·김인규. 2010. “ 파워인터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강지원 상임대표 “정치의 본질은 정책, 한줄 선심성이 아닌 구체적 공약 제시 필요”-6.2 지방선거 후보자 주요공약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 교육, 보육 관련 공약순-,” 『지방행정』 59집
- 양삼성. 2008. “매니페스토의 운용과 적실성,” 『국제정치연구』 제11권 제1호
- 엄기홍. 2008.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 이현출. 2006,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평가와 전망.
- 정동규. 2010. “매니페스토 실현 제도화, 광주 동구,” 『통일한국』 통권 제316호



조진만. 2008.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_\_\_\_\_. 2010. " 2010 시민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2호.

2002대선여성연대(2002), "제16대 대통령 후보 여성공약 비교·평가".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2004), 「2004년 제17대 총선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 기자 간담회」.

Bara, Judith (2005a), "What have the parties ever done for us?: A content analysis of the general election manifestos of the three main British parties to establish the significance of 'women's issues', 1979-2001," paper presented at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Women and politics Group Annual Conference 2005. 19th February 2005. University of Bristol.

\_\_\_\_\_(2005b), "A Question of Trust: Implementing Party Manifesto," *Parliamentary Affairs*, vol. 58. no. 3. 585-599.

\_\_\_\_\_(2006), "The 2005 Manifestos: A Sense of Deja Vu?,"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vol. 16, no.3, 265-281. Routledge.

Budge, Ian (2001), "Theory and Measurement of Party Polity Position", in Ian Budge, Hans-Dieter Klingemann, Andrea Volkens, Judith Bara, et al., *Mapping Policy Preference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Hofferbert, Richard I. and Ian Budge(1992), "The Party Mandate and the Westminster Model : Election Programmes and Government Spending in Britain, 1948-85,"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2. no.2. 151-182.

## [부록] 민선5기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의 여성관련 공약

### 1. 송파구청장 박 춘 희

공약 1. 송파를 문화. 관광의 도시,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과 연계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 제2롯데월드, 잠실한강공원 특화사업,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잠실종합운동장,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을 연계한 문화. 관광벨트 구축 및 일자리창출
- \* 세계적 수준의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잠실한강공원 특화사업
- \* 잠실종합운동장 컨벤션. 관광 복합단지 조성 계획 수립
- \*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공원을 연계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
- \* 석촌호수 워터프론트 사업 추진
- \*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설치

공약 2.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 \* 창업지원시책과 연계한 지역 내 예비창업자 지원
- \* 지역공동체 일자리 조성을 통한 자체 고용 확대
-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 \* 여성창업보육센터(동남권 여성발전센터) 유치
- \*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일할 수 있는 주부 일자리 제공
- \* 노인일자리 제공 및 고용 연장
- \* 실직자를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구축

공약3. 출산에서 보육까지 책임지는,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송파

-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 \* 구립 어린이집 시설의 현대화 및 장애아 통합형, 시간연장형, 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 보육시설을 확대
- \*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돌보미 서비스 지원
- \*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료 지원 확대

공약 4. 빠르고 안전한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공사구간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 송파대로 지하공간을 고려한 지하차도구조 검토 및 개선방안수립
- \* 송파~용산 간선급행철도 노선을 위례신도시~가락시장역~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노선변경대안 제시
- \* 거여동길 개선으로 기능체계 강화와 미연결 도로구간 연결을 통하여 동서축 가로망 개선

공약 5.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박춘희가 만들겠습니다.

- \* 저소득층 우선의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직영급식 추진
- \* 학교시설 개선 및 학교 운영지원비 확대를 통한 학습 준비물 지원
- \* 청소년 역량개발, 성장지원 프로젝트 추진
- \* 작은 도서관 확대 설치 및 방과 후 학교 도서관 개방
- \* 교사의 학습연구 지원으로 공교육직 향상
- \* 방과 후 학교 강좌 확대
- \*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교과교실 도입

## 2. 강남구청장 신 연 회

공약1. 교육 명문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 \* 자녀교육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전한 우리 자녀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생활지원 필요 계층의 교육복지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 \*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 수서 구립 대표 도서관 건립 추진

공약 2. 강남구의 자존심, 행복 복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 부부가 함께 일하며 다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기초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 여성을 위한 교육 균등의 정책 개발과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 \* 장애우를 위한 시설지원과 제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강남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 주민참여 방향으로 풀겠습니다.

- \*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의 참여와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 강남의 도심과 천혜의 자연을 남북으로 잇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휴식과 산책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구룡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상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 \* 세곡동 지역 일대를 친환경 주거 모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강남이 서울의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고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 경제의 튼튼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강남을 ‘경제도심’으로 위상을 격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를 서울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활용하겠습니다.
- \* 학여울역의 SETEC부지내 사유지에 명품 뮤지컬 전용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공약 5. 강남 교통, 검토는 꼼꼼하게 그러나 시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 강남의 지하철 망은 동서축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어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남북방향으로 연결수단이 없어 실제로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히 청담동, 대치동, 논현동 등 지하철 서비스 주요 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 전문가 그룹을 구성, 타당성 조사 및 계획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 \* 2014년 건설 확정된 KTX 수서역사에 집중되는 교통 처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더불어 이 지역 일대의 쇼핑, 패션, 문화 복합 콤플렉스, 저탄소 녹색환경을 실현한 모델지구로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홍 미 영

공약 1. 교육, 건강을 지키는 ‘생기발랄’ 부평

-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센터 설립
- \*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 부평구 도시보건지소 설립
- \*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 2.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멋스런’ 부평

- \* 생태하천으로 태어나는 굴포천
- \* 문화향유 공간 확충

공약 3. 지역경제의 든든한 뿌리 ‘기업 살리기’ 신명난 부평

- \* 기업과 함께 만드는 희망거리 조성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 자활사업 공동체 활성화

공약 4.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부평

- \* 보육시설 완비된 아파트형 공장설립지원
- \* 보육시설 지원으로 안심보육 실현
- \* 장애인 이용권 및 고용지원
- \*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 \*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공약 5. 시민중심 행정 펼치는 투명한 부평

- \*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
- \* 시스템 혁신으로 공정한 행정
- \*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 \* 주민 참여형 행정

## 4. 대구 중구청장 운 순 영

### 공약 1.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설치 운영
- \* 현대백화점 대구점 개장시 구민 우선 채용
- \* 중구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 노인 일자리 사업확대 운영
- \*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산

### 공약 2. 살고 싶은 도심 만들기

-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차 사업(북성로일원 공공 디자인)
- \* 상밖골목(읍성 과거길) 재현
- \* 근대 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 계산동~향촌동
-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강력추진
- \* 중구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동성로 정보화 거리 인프라 조성

### 공약 3. 부자 중구 만들기

- \* 도심상권과 시장 활성화
- \*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
- \* 한방 특구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 공약 4. 관광 중구 만들기

- \* 천개의 골목, 천개의 스토리 입히기로 관광산업 육성
- \* 향촌동 전후 문화재현관 조성
- \* 상화문학동인 체험관 조성
- \* 마당깊은 집 조성
- \*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
- \* 동성로 로드아트 프로젝트 추진
- \* 다양한 골목투어 확대

### 공약 5. 행복 중구 만들기

- \*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 \*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 \*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 \*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 \* 저 출산해소를 위한 출산장려제도 확대
- \* 무장애 중구 만들기 지속추진
- \* 거미줄망 보호체계 구축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사업
- \* 효사랑 나눔 사업 전개

## 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송 속 희

공약 1. 사상공업지역을 도시첨단산업기지로 구축하겠습니다.

- \* 노후되고 슬럼화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 지식 및 기술복합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첨단 산업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외부선도업체를 유지함으로써 도시형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OKTA(해외한인무역협회)와 연계하여 연내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2. 사상역세권을 개발하고 사상로를 문화와 축제의 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 사상역일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사상근린공원과 국립 도서관 등의 백양로와 사상광장로의 연결을 통해 삼락강변공원까지 에코축을 구축하고, 사상광장로를 문화와 축제의 광장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공약3. 사상구 3대 하천을 테마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사상구의 3대 하천을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테마 하천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주변에 운동과 레저시설이 많은 학장천은 레저하천으로, 주 거지역의 삼락천은 그린하천으로, 공장지역의 감전천은 에코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약 4. 교육명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상구의 차별화된 교육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외부유출을 억제시키겠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관내 우수학교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공약 5. 삼락강변공원과 사상근린공원을 부산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 \* 143만명의 삼락강변공원을 이색적인 테마공간으로 지속개발하여 사상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부산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근린공원도 어린이 과학놀이터, 가족피크닉장 조성 등을 통해서 서부산권의 대표적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김은숙

공약 1. 더불어 사는 세상

- \* 중구 행복 수놓기 운동(복지 도우미 및 바우처 사업,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 원로의집 순회 의료 서비스 실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 \* 주. 야간 운영 보육시설 설치

공약 2. 건강한 웰빙사회

- \*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 \* 복지 차량 대출사업(행정 렌트카)

공약 3. 희망을 여는 지역경제

- \* 중구장기발전 계획 수립
- \*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유도

공약 4. 미래지향도시 중구

- \* 야간경관 테마거리 조성
- \*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관리 고지대 Green 테마공원 조성
- \* 고지대 주민을 위한 북카페 조성

공약 5. 문화관광중구

- \*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
- \*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 조성
- \* 빛의 축제 활성화